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1993. 12. 25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1993년은 東西 冷戰體制 붕괴이후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經濟的 地域統合 추세가 확산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세계 자유경제질서의 창출, 그리고 미·소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추세, 민족간 갈등관계의 증대 등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격동을 겪으면서도 미·러간 동반자관계의 발전 및 미·중간 관계개선 등으로 한반도 주변환경은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한 한 해였다.

이같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비교적 安定化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체제불안을 절감하게 된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 理念教育과 社會統制를 강화하면서 「핵안전협정」 탈퇴선언을 계기로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여 군사지도력을 과시하는 한편, 핵무기개발을 협상카드화하여 대미접근에 사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협상 자세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여 대남선전공세만을 강화하였을 뿐, 비타협적 자세로 南北關係를 전반적으로 경색시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고위급회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등 일련의 남북 대화를 중단시키고 오직 핵문제를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에 매

달린 한 해였다.

이런 중에도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國際共助體制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경주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주변정세의 긍정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북한 핵문제의 타결과 더불어 1994년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분단 반세기를 눈앞에 둔 1994년은 반드시 남북한 관계진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족통일연구원은 1993년의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한 관계의 현황을 分析하고, 그 토대위에서 1994년의 정세변화에 대한 展望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의 分析과 展望이 통일문제 관련기관과 각계인사들의 남북관계 전개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3년 12월 25일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要 約

1. 統一環境

가. 世界情勢

1993년 세계질서는 지역통합 추세, 지역차원의 군비경쟁 심화, 경제력의 중요성 증대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대두 등으로 다극화 및 다원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문제에 대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대내 경제문제로 인하여 지역국들의 역할분담 확대 요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였다. 또한,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지역강대세력으로 등장하여 세계정치문제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써 다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냉전 시대에 잠재되었던 민족 및 종파간 갈등 등 지역분쟁은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환경파괴, 인구폭발, 에이즈, 난민, 마약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1994년 세계질서는 더욱 다원화 양상을 띠고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다자주의 선호, 지역강대국들의 발언권 증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적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이 예상된다.

강대국간 핵 및 군비 감축 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미·러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지역차원의 군비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내 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은 제고될 것이다.

미국 및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상대적 경기불황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질서는 더욱 다원화될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의 창설은 국제경제 체제에서의 자유무역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및 경제협력 분위기 제고에 따라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인 환경 및 마약·테러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안보·경제 문제 및 비전통적 위협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리더쉽과 비전 제시가 요구될 것이다.

나. 東北亞情勢

1993년 동북아에서는 군비경쟁과 북한 핵문제 등 새로운 긴장요인이 대두되기는 하였으나 미·러간 동반자관계 발전에 따른 탈냉전 추세와 역내 경제협력 증대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역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994년 동북아에서는 일·중의 역할증대, 역내 군비경쟁, 러시아 정세불안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지속될 것이나, 지역질서 안정에 중요한 요인인 역내 4강간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협력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안보문제와 관련, 냉전이후 동북아지역 질서에 3대 지주가 되고 있는 미·중, 일·중 및 미·일관계가 대체적으로 협력지향

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특히 1993년 9월말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 기초를 수정하는 등 對中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도 경제발전을 위해 對美關係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994년에는 미·중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중관계 진전은 역내 정세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역내 軍備競爭, 러시아 정세불안, 중국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 등은 동북아 지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러한 긴장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북아 多者安保協力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經濟問題와 관련, 1994년 동북아지역국간 經濟交流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APEC내에서의 「무역·투자위원회」 창설 합의 등으로 볼 때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역내국가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미국과 역내국간 貿易摩擦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될 이와 같은 협력 분위기는 韓半島 統一環境에 부정적인 영향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미·일·중·러 4강간 관계발전은 역내국가간 信賴를 공고히 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地域平和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협증대 추세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추세는 주변환경을 안정시키고 남북한간 평화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상기한 지역내 군비경쟁 및 러시아 정세불안 등의 지역불안요인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변4강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점과 북한이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한국과의 직접협상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는 점은 남북한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2. 北韓情勢

가. 對內情勢

1993년 북한은 사회일탈방지를 위한 「우리 식 사회주의」 이념강화, 민족통합을 위한 「10대강령」 실천 강조,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 경제개방관련 법률 제정 가속화,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 등에 역점을 두었다.

1994년에도 북한은 위와 같은 기초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수령중심의 결속과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10대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김정일 우상화와 권력승계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권의 완전 승계를 의미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3대제일주의」(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에 입각, 대내적으로는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노동자·인텔리들에 대한 독려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 관련법에 따른 외국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제한된 개방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상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내적 사회통제와 이를 위한 각종 사회단체 집회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집단적 사회일탈행위는 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경제적 곤란, 개방에 따른 해외정보의 유입 등으로 인한 개별적 경제·사회 일탈행위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내부결속과 군지도자로서의 김정일 권위 강화를 위해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우선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특히 군사력 증강을 위해 북한은 군사훈련 강화 및 재래식 무기증강 뿐만 아니라 미사일, 生化學 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중국의 한반도정세 안정 회구, 남한·미국·일본의 대북 온건정책, 미국의 대북 대량보복 전략 등으로 인해 경제제재 등 UN에 의한 제재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선제적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對外關係

1993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북·중 관계는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띄었고, 북·미 관계도 대화수준이 격상되는 등 북한의 대중·미 외교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러·일 관계는 별진전이 없었다.

1994년 북한의 주변 4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유대와 경제 교류·협력, 군사교류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 추진을 위해 이념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 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북·중 교역 및 경험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둘째, 북한과 미국 관계는 북한핵문제에 관한 북·미간 협상 진전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미간 핵협상은 양국의 파국회피 의지에 따라 긍정적 진전이 예상되는 바, 1994년에는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미간 대화수준 격상, 경제협력 증진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예견된다.

셋째,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간 경제 교류는 러시아의 인플레이 심화와 북한의 외화 부족 및 수출품 결핍으로 인해 급속한 신장은 어려울 것이나 러시아의 실리위주 정책에 의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러간 군사관계는 동맹관계 재조정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수물자 판매 등 교류·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1994년에 북·미간 핵협상의 전향적 진행이 예견되는 바, 북한과 일본 관계도 정치·경제 양면에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이은혜문제를 구실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북경제 교류 논의 자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對南戰略

1993년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남한정부 배제논리에 바탕을 둔 비정부간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달성 전술로서 민족 개념을 부각시킨 「10대강령」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을 통한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한 북한 정통성론 보강을 위해 단군릉 발굴을 통한 민족문화유산 계승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94년에도 북한의 남한정부배제논리 및 통일전선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은 각종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 남한정부를 ‘파쑈정부’로 비난하는 한편, 남한정부 타도를 위해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 대한 선전·선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주민들의 사기저하, 남한내 문민정부 출현에 따른 운동권의 약화, 미국·일본의 남북 대화재개 압력 등 주·객관적 환경변화로 인해 대남혁명전략 기조는 고수하면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첫째, 북한은 「10대강령」에서 제시한 「범민족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한 전술로서 남한정부를 통일세력으로 포함시켜, 남한정부 및 각계·각층이 포함된 「범민족통일국가창립협의회」 구성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북한인민들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침체로 인한 민족허무주의에서 탈피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대남·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전술로서 남한정부 및 각계·각층이 망라된 「단군학술조사단」 내지는 「단군묘지방문단」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3. 南北韓關係

가. 核問題

1993년 북한핵문제는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결정과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국제문제화 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지지하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

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미·북간 제1단계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NPT 탈퇴 유보결정이 있었고, 제2단계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제3단계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AEA 및 남한과 대화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제3단계 고위급회담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미간 고위급회담의 성패에 달려 있다. 미국은 NPT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5년까지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을 체결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북한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북한도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 등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조만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1994년중 IAEA 임시사찰 수용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여도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94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 當局間 對話

1993년 南北 當局間 對話는 特使交換을 협의하기 위한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만 이루어졌다. 세차례의 남북 실무대표 접

측에서 남북한은 特使의 級, 수행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 안전보장 등에 관해 의견의 접근을 보였다. 그러나 유엔총회가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對北決議案을 채택하자 북한측은 이에 항의하여 더이상의 실무대표접촉을 거부하였고, 1993년 남·북 당국간 대화는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되었다.

1994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체제불안, 핵문제, 대남강경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화해의 점점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할 경우 남북간에는 특사교환을 위한 회담이 추진될 것이나, 북한의 형식적인 남북대화 전략을 감안할 때 북한은 특사교환시 남북 상호사찰 문제 등 핵문제와 관련된 의제의 논의는 회피하려 할 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체제의 재가동 및 「기본합의서」 실천문제와 관련, 만약 미·북한관계가 개선되어 1994년도에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기본합의서」 이행을 기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이미 특사교환제의를 통해 고위급회담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시 체제동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협상에 있어서 미·북 양국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기본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체제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交流·協力

1993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경제면에서 남북한 교역규모는 11월까지 前年 同期對比 7% 감소하였고, 雙務接觸에 의한 人的 交流는 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前年度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남북간 對話斷絶로 인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다만 남한정부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人道的 次元에서 북한에 송환한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

1994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핵문제 협상 진전상황에 좌우될 것인 바, 북한이 核査察 수용자세를 보이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북한 이 모두 경제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북한의 외화부족과 생산능력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남북교역의 급격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남북간 賃加工交易은 신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임가공교역이 자본과 고도의 기술없이도 가능한 교역형태로서 북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임가공교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994년말까지는 남북한이 남포공단에 경공업분야의 소규모 合作投資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경제난과 국제고립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난 탈피를 위해 과학, 기술, 정보면에서 남한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외에, 국제고립탈피를 위해 학술, 體育, 예술 등의 측면에서 대남선전 공세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개방과 불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준의 사회·문화 교류는 회피할 것인 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도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1994년 중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한국정부는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재개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산가족문제가 북한의 사회개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북한은 논의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 協力

1993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접촉 및 협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한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북한이 미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는 선전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대결상태가 심화되었다.

1994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대결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논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명칭 문제나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투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북한은 다자간 협력의 일환으로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범

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인모 귀환 후 북한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또 다시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대남 선전공세를 강화한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1994년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급격히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目 次

I. 統一環境	1
1. 世界情勢	1
가. 政治와 軍事·安保	1
나. 經濟	9
2. 東北亞情勢	12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2
나. 東北亞 安保環境	30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38
가. 韓·美關係	38
나. 韓·日關係	40
다. 韓·中關係	43
라. 韓·러關係	46
II. 北韓情勢	49
1. 對內情勢	49
가. 理念과 權力承繼	49
나. 經濟事情과 經濟開放	52
다. 社會統制와 社會逸脫	58
라. 軍事動向	62
2. 主要 對外關係	67
가. 北·中關係	67

나. 北·러關係	70
다. 北·日關係	73
라. 北·美關係	76
3. 對南戰略	79
Ⅲ. 南北韓關係	85
1. 核問題	85
2. 當局間 對話	93
3. 交流·協力	102
가. 經濟分野	102
나. 社會·文化分野	107
다. 離散家族問題	111
4.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13

I. 統一環境

1. 世界情勢

가. 政治와 軍事·安保

(1) 地域統合 進展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정치에서 經濟力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유럽통합으로 대표되는 地域統合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유럽 및 일본이 정치적 강대세력으로 부상하는 國際秩序의 多極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市場統合을 이룬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마스트리히트조약 합헌판결(10.12)에 의한 독일의 비준 완료 이후 브뤼셀 특별정상회담(10.29)을 개최하여 11월 1일부로 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을 발효시켰다. 이로써 유럽통합은 1994년부터 제2단계 通貨統合(EMU)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서유럽의 안보협약체인 서구동맹(WEU)을 유럽공동체(EC) 安保機構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럽통화기구, 유럽환경기구, 유럽경찰기구 등 기타 신설 유럽동맹기구의 소재지를 일괄 확정지었다. 이로써 유럽통합은 화폐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의 통합도 추진되어 유럽동맹(EU)으로의 질적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동맹은 유럽내 다양한 정치·안

보 및 경제·사회 문제와 나토와의 役割分擔問題에 대한 회원국 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미국 및 아시아제국 등 역외권과의 마찰요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을 비준(11.20)함으로써 북미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1994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유럽 및 북미지역의 지역통합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경제블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안보목적의 기존연합을 점차 경제분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東南亞國家聯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를 개최(7.26~28)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배타주의 및 미국주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운영에도 제동을 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아·태지역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조정하면서 兩 지역에서 主導權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11.20)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사이에 보다 광역적이고 개방적인 경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地域共同體라는 공감대를 더욱 제고시켰다.

(2) 地域次元의 軍備競争 深化

1993년 미·러 등 강대국간 核 및 軍備減縮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에서는 軍備競争이 심화되었다. 미·러 頂上은 제2 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SALT II)에 조인(1.3), 다탄두 지상 발사 핵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전략핵무기를 10년내에 2/3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36개국 대표들이 화학무기금지 협약(CWC) 서명(1.15)을 통해 생화학무기의 생산, 비축 및 확산 금지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핵실험 잠정 중단조치를 선언(7.3)하고,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동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 핵비확산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통과(2.25)시키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3.12)함으로써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중국의 지하핵실험 실시(10.5)와 이스라엘, 인도 및 파키스탄 등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노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의 對러시아 협상 및 서방 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핵보유 견지 노력 등도 군축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선진제국이 주도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 성공 및 對중동 미사일수출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재래식무기 감축과 관련, 유럽국가들은 유럽재래식무기 감축 협정(CFE)에 입각하여 군축을 단행하고 있으나, 美軍 감축에 따라 자신의 안보문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무기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 차원의 군축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러의 약화에 따른 세력균형 변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東아시아 제국의 군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일본, 중국, 대만 및 한국이 모두 주요 무기수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병력 감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선진무기 도입으로 전환,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도입과 항공모함 및 잠수함 수주 등을 통해 군사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 추진과 함께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上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994년에도 미·러 등 강대국간 핵군축 노력과 군비감축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국들의 군사현대화 및 군비증강 노력이 병행되는 상반된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 유엔의 役割增大와 限界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이념대립이 약화됨에 따라 이스라엘과 PLO 사이의 평화협정 조인(9.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際紛爭이 부분적으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 兩極體制下

에서 잠재되어 있던 민족 및 종파간 분쟁과 지역분쟁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미국은 지역분쟁 해결자로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多者主義를 표방하면서 유엔 등 國際機構를 통한 세계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캄보디아, 소말리아 및 보스니아에서 유엔의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 常設化 및 費用分擔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내부적으로 유엔기구의 內實化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재정적 공헌이 두드러진 일본 및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 개편에 관한 각국 입장을 취합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8.2)하였다.

그러나 유엔 財政問題 해결 및 구조 재조정을 통한 유엔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 해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강대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결여되는 한 유엔의 국제분쟁 해결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안보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비용 문제로 유엔조직이 개편된다고 해도 유엔의 국제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평화유지군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미국은 1994년 3월 31일까지 비전투 지원요원을

제외한 모든 전투병력 철수입장을 발표(10.7)하였다. 또한 보스니아문제에 있어서도 유엔과 유럽공동체가 仲裁案을 제시하고 있으나, 3개 종족(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이슬람계)간 영토분할 및 영토권보장 문제 그리고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유럽 일부국가들간 견해차로 인해 보스니아문제에 대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4년에도 유엔은 國際紛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요구받을 것이고 부분적 효력을 발휘할 것이나, 국제분쟁의 직접적 해결에는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4) 地域 安保協議體 論議 加速化

미·러의 軍備減縮으로 야기된 지역안보의 不確實性和 지역국간 상호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군비경쟁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자원이용, 테러, 마약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행동보다 국제협력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하에 다자간 安保協議體 구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FSC)을 설립하여('92.7) 독자적 軍備統制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유럽 다자안보협의체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 경제적 통합과 안보협력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지역국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7.23~26)는 1994년 7월 방콕 회의부터 기존의 13개 참가국 외에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권 초청국을 참가국으로 하는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북아 6개국(10월 회의시 북한 불참)이 샌디에고에서 民·官이 참여하는 형식(Track Two)으로 「동북아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은 과거 역내 쌍무간 안보동맹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클린턴 행정부 출범후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도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혹은 소극적 수용 자세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1994년에는 東北亞地域 6개국도 지역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자안보협의체 창설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同 協議體에서 논의될 사안들이 남북한 및 중국과 대만 등 분단국문제와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금지, 미사일 기술통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게 되고 인권문제, 환경 파괴, 난민문제 등 비전통적 불안요인들을 망라하게 될 경우, 참여국들의 이해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 國際政治의 多元化

냉전이후시대 世界大戰 발발 위험성은 감소되었으나, 과거 잠재되었던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민족 및 종파간 갈등 등 地域紛爭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주요 不安要因이 되고 있으며, 환경 파괴, 인구 폭발, AIDS, 난민, 마약, 인권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이 懸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대내 경제문제로 인해 다양한 安保威脅 요인들에 대처함에 있어 地域國들의 役割分擔 확대 요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多者主義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따른 유럽통합 진전과 국제정치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지역 강대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과 국제적인 「市民社會」인 「그린피스」(Greenpeace)와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등 국제 환경보호단체들의 발언권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는 정치·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맞물려 國際政治의 多元化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세계 안보문제 및 비전통적 위협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리더쉽과 비전 제시

가 요구될 것이다.

나. 經濟

(1) 自由貿易體制 維持努力

냉전이후시대 세계 각국간 경제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지역주의와 관리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저지하고자 미국을 포함한 북미국가들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제5차 회의(11.17~20)를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아·태지역의 개방적 무역체제 발전노력에 합의하였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아·태지역 최초의 지도자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1994년 지도자회의 개최를 합의하는 등 아·태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켰다.

또한 관세무역일반협정 회원국들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제7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타결(12.15)시켰다.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은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에 치중되었으나, GATT회원국들은 서비스 및 농수산 분야까지 포함하는 모든 교역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GATT회원국들은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기구가 완비된 세계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의해 UR협상이 주도되었다는 점은 향후 세계경제가 미국과 유럽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UR협상 타결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나, 선·후진국간 빈부격차 축소보다는 선진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994년의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에 의한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 地域經濟統合의 進展

세계경제는 1993년에도 獨逸의 統一費用 支出 및 日本의 거품經濟 등으로 沈滯局面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미국경제는 클린턴 신행정부의 강력한 經濟回復政策으로 다소간 성장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유럽공동체(EC)는 유럽단일시장 출범(1.1)과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11.1)등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향한 큰 進展을 이룩하였다. 유럽공동체는 유럽단일통화 및 유럽중앙은행 창출을 위해 1994년 1월 1일 유럽통화기구(EMI)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유럽공동체는 기존 회원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와 함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의 新規加入(1994년 예정)을 추진하는 등 유럽통합을 유럽 全域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

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공동특혜관세(CEPT)제도를 통하여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1994년에도 세계경제의 地域主義化 趨勢는 유럽공동체가 지역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한 계속될 전망이다.

(3) 亞·太地域經濟의 重要性 增大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중심이 大西洋地域 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太平洋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대서양권의 경제활동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아·태지역은 1992년 기준 세계전체 GNP의 약 52%,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은 선진경제권의 兩大軸인 미국과 일본 및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국을 포함하고 있어서 2000년대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제는 1993년에도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구소련 및 동구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성장율이 2.2%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은 1993년에 5.4%의 成長率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1994년 세계경제는 豫想 經濟成長率 3.2% 및 貿易伸張率 5.0%('93, 3.0%)로 1993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지역의 경기회복은 여타지역에 비하여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중심축 이동은 아·태지역 구성국가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급증하는 相互依存度 관리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내국가들은 광범위한 형태의 아·태경제협력체와 더불어 동남아국가연합과 북미자유무역연합 또는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등 小地域的 次元의 기구를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의 세계경제의 중심 이동은 후기산업사회로 대변되는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경제성장 지속 여부와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활약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간 경쟁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이다.

2.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 美·日關係

1993년 미국과 일본에서 개혁의 기치를 내건 신정부가 출범됨으로써 미·일은 기존의 同盟關係를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단계로의 관계발전을 도모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役割增大를 용인하고,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변함없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일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증대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된 북한 핵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일간 긴밀한 정책 협의도 지속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등으로 인한 일본의 위협인식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일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일본내 自民黨이 퇴조하고 정치개혁을 주창하는 호소가와 내각이 출범(8.9)한 점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신내각이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표상하는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러시아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 전환에 대한 일본의 인적·재정적 기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공식 지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국내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의 대외 정책 재조정에 주목하여 일본은 對美 통상외교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構造調整協議(SII)를 대체할 對美 포괄적 협상창구 개설에 적극성을 보이는 한편, 쌍무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양국은 제네바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였으며,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건설시장 개방과 정부입찰 절차의 공정화 등의 사안에 합의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협정서 체결(12.15)에 기여하였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円貨 가치의 폭등과 일본 거품경제의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일본 경제의

하락세가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우려 또한 점증되었다. 미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일본의 참여와 기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방선진국회의(G-7)를 통한 일본의 역할증대를 보장하였다.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시(7.9~10) 미·일 양국은 일본의 經常收支 黒字 감축문제와 부문별 시장개방 문제를 협의할 「미·일 포괄경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일본은 同 합의에 따라 경상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 금융정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컴퓨터, 전기통신분야 등에서 정부조달을 확대하며, 금융, 보험 등 분야에서 규제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財政赤字를 대폭 삭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일본의 시장개방 진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시애틀에서의 APEC회원국 지도자회의(11.20)에서 역내 市場開放과 自由貿易秩序 확립에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東南아시아 제국과의 전통적인 경제관계를 중시하여 균형자적 역할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역내 불안을 고조시키는 北韓 核問題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미국은 일본내 핵개발 주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로동 1호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방어체제 확립을 지원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가 일본의 자체 핵개발 계획의 가속화를 결정

짓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미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해결까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경우,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수립 협상이 속개되고 경제관계가 활성화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경제관계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미·중관계가 浮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일관계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역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여부는 미·일 양국관계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經濟·通商關係에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미국은 쌍무적 차원에서 일본의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1994년 미·일 양국간 무역마찰과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2) 美·中關係

1993년 상반기 미·중간에는 미국의 對中 最惠國待遇 연장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무기수출 및 핵실험 재개 등으로 인하여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9월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行動備忘錄」을 채택하여 對中關係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미·중관계는 점차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부시 行政府의 對中 인권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하였던 클린턴 미행정부는 1993년 상반기 對中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시킬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王丹과 郭海峯 등 일부 반체제인사를 석방(2.17)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은 조건없이 중국에 대해 最惠國待遇를 연장(5.27)해 주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한도 제한 철폐안을 통과(7.20)시키고, 2000년 북경올림픽 유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7.26)하는 동시에 「티베트법안」을 채택(9.21)함으로써 미·중관계는 다시 梗塞局面으로 반전되었다. 또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M-11 미사일(부품)수출로 인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8.27)를 취하고, 8월 중국화물선 「銀河號」의 화학무기 원료 적재 혐의로 미국이 화물선의 순항을 방해한 사건도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2000년 올림픽 유치 노력 실패(8.24) 이후 중국이 핵실험금지 유예체제를 파기하고 핵실험을 재개(10.5)하였던 것도 미·중관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결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태 및 세계정세 안정에도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미국은 9월말 對中關係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行動備忘錄」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지

침에 입각, 10월부터 에스피 농무장관, 샤테커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및 프리먼 국방부 차관보의 訪中 등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對中 강경자세 완화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미·중간에는 천안문사건 이래 가장 활발한 정치·군사적 접촉이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찰스 프리먼이 국방부 관리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10.31~11.2)하였는 바, 이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래 최초의 미국 고위 국방부관리의 중국방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아·태경제협력 지도자회의시 클린턴과 江澤민간 정상회담이 개최(11.20)됨으로써 미·중관계가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對美 貿易黑字 문제도 미·중관계에 마찰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중국의 對美 무역흑자폭이 182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이 미국의 2대 무역적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3년에는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폭이 25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신정부가 대내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무역역조문제는 당연히 양국관계 발전에 심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게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중국상품의 對美 수출 쿼타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중국 전체 수출상품의 38%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개선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고,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중국은 양

해각서를 체결(10.10)하여 非關稅障壁 철폐 등 미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관계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994년 미국과 중국은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세계 전략 환경이 변화되었는 바, 미·중 양국이 1989년 천안문사건 이전과 같은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중국내 인권문제 및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와 관련 1994년 상반기 미·중간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중 양국의 타협자세를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최혜국대우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美·러關係

미·러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동이해를 기초로 同伴者關係를 구축하고 있는 바, 클린턴 미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諸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도 정치·경제·안보면에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개혁정책과 엘친 대통령의 지도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극우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가 선전한 러시아 총선(12.12)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클린턴 행정부와의 관계악화 방지 및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對美政策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미·러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확산 방지와 역내 군사데탕트 이행, 그리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약체 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미·러 양국은 「밴쿠버 선언」(4.4)을 통하여 북한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의 완벽한 이행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며 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軍備競爭에 따른 비용을 감축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축과 軍備統制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43개와 시설중 일부를 일본에 반환하고 서울과 의정부의 2개 기지 폐쇄계획을 발표(7.2)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5년간 극동군 병력을 12만명으로 감축했고 쿠릴열도에 배치된 40여대의 미그 23전투기를 5월까지 10대 이하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역내 군사긴장 완화, 일·중의 군사력 증대 견제,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 등을 위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對中 무기수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역내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신형탱크, 전함, 전투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에게도 군사무기 및 핵관련 기술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지역안정 저해와 군수시장 잠식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 및 평화유지를 구실로 역내 유일 초강국으로 남으려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방어적 성격의 군사정책을 추구할 것이나 자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新軍事독트린」을 채택(11.2)하였다.

미·러간 경제관계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4월 25일로 예정된 러시아 국민투표를 앞두고 16억 2천만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4.4)하였고, 「서방선진 7개국」(G-7)과 434억달러 추가지원에 합의(4.15)하였다. 러연방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분야와 유통·관광·건설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99개, 알래스카와 마가단 지역에 11개의 미국기업이 활동중이다.

향후 미·러 양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對南 위협과 핵개발 방지, 동북아지역내 군사긴장 완화, 일·중의 군사력 견제 등을 위하여 동반자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지역내 영향력 확보에 대한 상호견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모색에 대한 상이한 입장, 역내 무기수출 경쟁 등은 향후 동북아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된다.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러간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선 한·중·일의 무역장벽 제거와 시장개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면서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체제를 안정시켜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개혁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자국기업의 對러 진출을 위한 經協資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對러 경제·무역관계를 제한하는 法規定들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4) 日·中關係

일본에서는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군비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경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두자리수로 軍備를 증액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잠수함을 구입하는 등 裝備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과 일본 관할하에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하여 領有權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3년판 防衛白書에서 중국이 군현대화를 진행하면서 南沙群島, 西沙群島를 거점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자국의 안

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일본을 방문(5.29~6.1), 일본과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5.29)하였다. 이 회의는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 고위관료가 참여하여, 군사능력과 정책의도를 밝힘으로써 양국간 신뢰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중양국 외무장관은 시애틀 APEC 회담(11.20)의 합의에 따라 안보대화를 개최(12.20)하여 쌍무간 및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안보대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비내역 공개와 함께 중국의 군사행동 완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1월 미야자와독트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태지역내 정치·안보대화에 대한 적극 참여라는 일본의 대외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탈냉전 이후 아·태지역의 국제질서 재조정 논의가 미·일 주도하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 중국의 군비강화 추세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일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역내 질서 재조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양국간 안보대화에 합의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자국의 이익과 역내질서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對中政策은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중간 긴

장완화를 위해 仲裁役割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중국의 대중동 미사일부품 수출에 대한 보복으로 對中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인권보다는 경제협력을 우선시해 왔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의 정치발전 가능성을 믿는 독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이와 관련, 미야자와 일본수상은 미국방문시(4.16) 클린턴 대통령에게 인권문제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일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일·중 양국은 錢其琛 외교부장의 訪日時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합의하였다. 하타 쓰토무 일본외상은 시애틀 APEC 회의시(11.20) 錢其琛과 회동, 북한이 IAEA사찰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1994년 1월 일·중은 연례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를 통해서도 양국은 북한 핵문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1993년 일·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과 1992년 10월 천황 訪中 이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93년 양국간 무역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300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신규 직접투자도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21억달러, 투자총액은 3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년들어 지속되는 엔고와 동남아 국가들의 임금인상은 일본기

업의 중국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방확대, 정치 안정, 고속성장,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 전망은 매우 밝다.

요컨대, 1994년 일·중은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놓고 競爭關係를 보이면서 동시에 相互 協力を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중국은 역내질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중국은 일본의 PKO 참여확대 등 국제적 역할증대를 부분적으로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5) 日·러關係

1993년 중 일·러관계 주요 현안은 양국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지원 문제였다. 일본은 지난 수년간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대가로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반환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4월 서방 G-7 각료회담을 전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의 압력에 굴복, 對러 경제지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對러 정책을 선회하였다.

G-7 각료회담에서 선진국 경제장관들은 총 430억달러의 對러 경제협력에 합의하였고, 이중 일본은 약 40억달러의 경협을 약속(4.15)하였다. G-7 국가들은 옐친 대통령을 東京 정상회

담에 초청, 러시아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원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가 일본이 소외된 채 歐美國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우려하고 7월의 G-7 東京 정상회담의 최대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對러 경제원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 보다는 서방선진국들과의 협조체제 유지 차원에서 對러시아 경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북방영토 문제와 對러경협을 연계하는 일본의 對러정책 원칙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월 오와다 당시 일본 외무차관의 訪美 기간중 레이크 美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북방영토 문제에 있어서 일본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1993년 양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옌친 러시아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10.12~14)이었다. 옌친 대통령은 자신의 訪日에 있어서 북방영토 문제를 주된 의제로 하려는 일본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 표시로 두번이나 일본방문을 취소('92.9; '93.5)한 바 있다. 그러나 옌친은 의회와의 대결이 유혈사태로 끝난 직후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옌친의 訪日을 계기로 일본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러시아로부터 4개도서 중 2개의 반환에 합의한 1956년 공동성명 이행 약속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옌친 대

통령은 일·러 정상회담(10.12)에서 북방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병력을 이미 절반 이상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에 대한 철수의사를 밝혔을 뿐 북방영토 주둔 병력의 완전 철수와 이의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한 제시를 거부하였다. 그는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日·蘇間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모호한 성명으로 대신하였다.

옌친 대통령과 호소카와 총리는 일·러관계에 관한 도쿄선언과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경제선언을 채택하고 16개 문서에 서명(10.13)하였다. 도쿄선언을 통해 양국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북방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선언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제공과,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가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연료·에너지·수송·통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頂上은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IAEA사찰 수용,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양국 頂上은 일본이 러시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46억달러의 자금 중 현재까지 10%만 집행된 점을 감안, 나머지 경험자금 제공을 약속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러시아가 1994년 중 상환해야 할 부채 10억달러의 상환 연기에 합의(10.12)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對러 경험자금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

한편 10월 일·러간에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東海 투기가 쟁

점으로 부각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東海 핵폐기물 투기를 즉각 중지하도록 러시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빅토르 미하일로프 러시아 원자력부 장관은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10.22)하여, 일본도 액체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러시아가 하마로프스크에 핵폐기물 처리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일본이 매년 4천톤 정도의 우라늄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미하일로프 원자력부 장관은 러시아가 東海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임을 밝히고, 러시아의 방사능 물질 처리를 위한 외국의 재정적 지원 필요를 역설하는 한편, 외국에게 구소련의 해체된 핵무기에서 나온 농축우라늄을 구입해 줄 것을 제안(10.26)하였다.

현재 일본은 옐친과의 협조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개혁 성공과 정국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北方領土 반환을 비롯한 일본의 이익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옐친의 訪日을 계기로 정체되어 있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1994년에도 러시아의 정국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北方領土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옐친이 정치적 생존을 러시아 군부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 의회선거(12.12)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부상됨으로써 러시아가 북방영토 반환을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94년에

도 러·일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中·러關係

중·러는 상호 善隣關係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정치·경제·군사면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중국의 핵실험 및 공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에 대한 중국의 공격과 불법단속 문제로 인하여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양국간 정치적 협력과 관련, 자국내 少數民族問題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는 세르게이 샤흐라이 부수상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을 중국에 파견(7.21), 중국과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협의하였다.

軍事的 協力과 관련, 러시아 국방부장관 그라초프의 訪中을 계기로 중·러는 군사 및 기술분야 협력, 상호 교환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11.11)하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과 공해상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부속협정과 변경문제 협력방안도 조만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 3척이 1956년 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방문하였는 바(8.23~27), 역내 강국인 중·러의 군사협력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經濟協力과 관련, 현재 중국은 193개 기업이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건설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바, 러시아는 중국을 극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국경무역은 1993년 6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83% 증가하였다. 또한 중·러는 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철도 및 해상화물 수송부문에서의 협력에 합의(8.10)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국내경제 회복 및 외화수입을 위해 중국에 각종 군사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동시에 러시아 핵무기 기술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이는 주변국들로부터 우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기 26대, 일류신 76군수송기 6대 및 방공미사일을 이미 반입하였고, 미그 29기와 미그 31기 그리고 키에프급 항공모함 2척 추가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러시아는 10억 7천만달러 상당의 對中 부채중 5억달러를 첨단무기로 상환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3.10)하였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유치한 핵과학자 및 첨단무기 전문가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핵실험 재개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고무시키는 등 역내정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경제수역 침범 등을 이유로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1.16)하고 어선을 납치(6.9)하는 등 對러 공격행위를 취함에 따라 양국관계가 긴장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내 경제개혁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국가들과 선린관계 및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중국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위하여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바, 1994년 중·러간 선린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견제를 위해서도 중·러는 善隣關係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 협력은 우선 군사·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외화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對中 무기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은 미그 31기를 비롯한 최신무기들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러간 철도 및 해상수송망 확충과 중국 화폐에 의한 決濟方式 채택 등으로 양국간 교역과 변경무역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러간 경제·군사관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핵실험 및 오희츠크해 조업문제 등과 같이 양국의 지엽적인 이익이 관련된 분야에서는 갈등과 대립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東北亞 安保環境

동북아 4強間 兩者關係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93년 동북아에서는 脫冷戰 추세가 심화되었으나, 軍備競爭과 북한 핵문제 등 새로운 긴장요인이 대두됨으로써 不安定 局面이 지속되었다. 러시아 열친정부에 대해 미국이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핵확산방지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러시아가 협

력함으로써 미·러관계가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미·러간 상호 신뢰구축은 동북아 역내국가간 和解·協力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내질서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관계도 1993년 하반기 이후 점차 협력지향적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安保對話 개최에 합의(5.29)하고 경제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역내질서 안정유지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러간에도 경제교류 확대, 지도부 인사교류 및 국경선 문제와 변경지역 주둔 병력 감축문제 논의 등을 통해 상호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러간의 정치·군사적 협력 모색 그리고 호소카와 총리의 방한시(11.6)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정립 약속 등도 동북아의 화해와 緊張緩和 추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APEC 지도자회의에서 역내국가들이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를 거론한 점도 역내 상호 理解와 協力を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러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역내 勢力空白을 메꾸기 위한 일·중의 역할증대 움직임,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 영토 문제 등 기존 분쟁요인 상존, 러시아 정세 불안 및 중국과 북한의 權力承繼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는 동북아 4強間 勢力均衡 재편과정에서 과도기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미·러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역내 세력공백 출현 가능성이 역내 질서안정에 잠재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동북아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에서 主導權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해외주둔 미군 유지비 삭감 필요하에 주둔국에 미군 유지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역내에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캄보디아와 모잠비크에 自衛隊를 파병함으로써 역내 정치·군사적 발언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도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꾀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세력균형 변화는 동북아질서에 潛在的 緊張要因이 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일·중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으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軍事力 競爭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비(1993년 377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27 戰鬪機와 SA-10 미사일 등 첨단무기와 공중급유기술 및 우라늄 濃縮技術을 도입하고, MIG-29 전투기의 합작생산에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근 4년동안 國防費를 연 12% 이상 증액하고 핵실험을 재개(10.5)하는 등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동남아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3척의 호위함과 40기의 함대

함 미사일을 구매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군사력 경쟁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이 축적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역내 불안요인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1994년에도 동북아지역에서 軍備競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중, 일·러 및 중·동남아간 領土紛爭도 동북아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南沙群島와 西沙群島에 군용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남지나해와 동해에서 영향력 신장을 기도함으로써 영유권문제 및 해상 수송로 확보문제와 관련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일본간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도 역내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러시아 국내정세와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1994년에도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넷째, 러시아의 政治不安과 이에 따른 경제혼란 그리고 중국과 북한내 權力承繼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불안정도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파 의회에 대한 엘친의 무력진압으로 개혁파가 러시아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혼란으로 인하여 엘친의 지지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1994년에도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鄧小平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4년에는 중국에서 권력승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 과정에서 지도부 간 권력장악을 위한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北韓의 核武器 개발 기도와 노동 1호 미사일 개발은 북한과 일본간 수교교섭을 중단시키고 남북대화를 지연시키는 등 지역 긴장완화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3.12) 이후 미, 일, 중과 한국 등 관련 당사자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6.12)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강온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1994년 1월과 9월 개최될 핵확산금지체제('95.3 만료) 연장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일본과 대만 등 지역국가들의 핵개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유지 수단 및 대미·일 수교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바, 1994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북·일 수교교섭도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력균형 변화와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지역 불안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신뢰구축을 제도화 하기 위해 역내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대내 경제난으로 일본과 한국에 美軍 駐屯 分擔 金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시(7.10) 역내 공통의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샌디에고에서 「동북

아 협력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또한 시애틀에서 APEC 비공식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주변환경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중국도 지역불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1994년에는 역내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중, 일·중, 일·러 등 강대국간 및 남북한간 상호 불신이 단기간내에 완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94년 역내 국가들이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문제와 관련, 域內 國家間 交易 增大 등 經濟協力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 요구에 직면, 일본은 쌀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장개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미국과의 貿易摩擦을 해소하고 GATT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의 對韓 技術移轉問題를 협의(11.6)함으로써 경제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APEC내에서의 「무역·투자위원회」 창설 합의 등으로 동북아시아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역내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도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토지임대법을 제정(11.5)하는 등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핵개발문제와 투자위험도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경제협력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러시아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당분간 北方 4島를 일본에 반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1994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지원이 대폭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북미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地域主義化 趨勢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中華經濟圈」, 「環日本海 經濟圈」 및 「黃海經濟圈」 등 地域經濟協力體 形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조만간 다자경제 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동북아 지역국들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일본주도의 지역경제 불력화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동북아에서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같은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APEC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韓半島 統一環境에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역내질서의 다극화 추세와 미,일,중,러 등

역내 4강관계 진전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역내 국가간 신뢰를 공고히 하여 지역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관계 재조정과 한·러간 정치·군사협력관계 구축도 남북한간 군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간 정치·군사적 협력관계 모색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경험 증대 추세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락하고 남북 특사교환을 수락할 경우 북한과 미·일간 및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일간 관계개선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추세는 주변환경을 안정시키고 남북한간 평화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4강은 한반도통일로 인한 不確實한 未來보다는 分斷의 안정적 관리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역내 다자간 신뢰구축 제안 대두도 한반도문제의 國際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은 한반도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진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따른 지역긴장은 남북간의 군비통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이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한국과의 직접협상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는 점도 남북한

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에서 주변 4강간 화해와 긴장완화 추세가 심화되는 한편, 기존 갈등요인이 잔존하는 가운데 군비경쟁 등 새로운 긴장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적 잔재와 탈냉전적 추세가 병존하는 동북아질서의 이중구조는 199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한국과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1993년 한·미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인하여 한·미간 정치·군사적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클린턴 행정부가 國內經濟 再建에 장애가 되는 대외 경제관계를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駐韓美軍 주둔경비에 대한 분담금 확대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1993년 3월이래 북한 핵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시킴으로써, 미국은 한국에 대한 防衛公約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시까지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적극 가동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북경 참사관급 접촉, 뉴욕 실무급 비공

식 접촉 및 제네바에서의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하였으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자세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한·미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관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7.10~11) 정상회담을 갖고 쌍무간 안보협력관계의 지속적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호혜원칙에 바탕을 둔 경제·통상·과학·기술 동반관계 심화 필요성에 의견 일치로 보았다. 또한, 한·미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로서 「경제협력 대화기구」(DEC)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9월과 10월에 두차례 회합을 가졌다.

아울러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11.3~4)에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 이행을 위한 확고한 보장책이 필요하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시까지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을 계속 유보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1994년도 방위비 분담액을 1993년의 2억 2천만달러에서 2억 6천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1994년 12월 1일까지 한국군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시(11.23)에도 양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책조정을 통해 核査察과 特使交換이 이루어져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양국간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1994년에도 한·미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는 계속 공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12월말 이후 미국과의 핵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1994년 미국과 북한간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1994년 상반기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停戰協定の 平和協定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진전의 폭과 속도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노정될 경우 1994년 한·미간 마찰이 야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간 경제관계에서는 시장개방 문제와 互惠原則에 기초한 공정한 무역관행 이행문제가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쌀시장 개방 등 한국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한·미간 합의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APEC을 통한 아·태지역의 경제활성화가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994년 역내경제 활성화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양국간 노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韓·日關係

1993년 한국과 일본 신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함으로써 한·일은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

다. 특히 호소카와 총리의 방한(11.6~7)을 계기로 1992년 이래 한·일간 불편한 관계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호소카와 수상은 방한시 종군위안부 문제 및 창씨개명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식민지 시대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한 데 대해 가해자로서 일본이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하였다. 호소카와 총리의 식민통치 사과발언은 과거 어느 정권의 사과 보다도 강도높은 것으로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한·일관계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신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일본정부는 공식발표를 통해 2차 대전당시 종군위안부 모집에 일본 군·관이 관여했음을 시인하였고, 일본문부성은 정신대 문제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외교문제로 다시 전면에 비화될 가능성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轉向的 자세와 김영삼 정부의 유연한 대일 정책을 고려할 때, 1994년 양국은 過去事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貿易逆潮 문제는 한·일 양국간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 1992년 7월 일본이 경제협력 및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역조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부품·기계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엔고로 인한 유리한 무역환경이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쇄되고 있다. 1993년도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약 82억 달러에 이르러 전망이며, 한·일간 경제구조 및 일본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1994년도 한·일간 무역역조문제가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貿易不均衡 지속은 양국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한·일은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일신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시애틀 APEC각료회의시 양국은 통상장관 회동을 계기로 제3국에의 공동진출을 위해 수출보험을 공동으로 負擔하기로 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부품공업 육성지원과 기술자 훈련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호소카와 정부는 미국의 市場開放 압력에 대응하여 제품수입 촉진, 대일투자 확대, 정부규제 완화, 내수확대책 등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도있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 貿易逆潮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할 것이나 1994년에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일본이 政治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1994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확고한 국내 지지기반하에 대일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일본 호소카와 정부도 自民黨 정부와는 달리 과거사의 솔직한 청산 바탕위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증대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1994년 한·일은 경제·정치·문화 등 제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일간 수교교섭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일수교 교섭과정에서 한·일간 마찰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다. 韓·中關係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 핵문제 등 정치·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1993년 한·중관계는 형식적 관계에서 진정한 우호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3년 한·중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기존에 축적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정치협력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田紀雲 중국 全人大 常務副委員長의 訪韓(6.6~12)을 계기로 한·중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됨으로써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게 되었으며,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의 訪韓(5.26~28)과 한승주 외무장관의 訪中(10.27~30) 및 시애틀 정상회담(11.20) 등은 한·중 정치관계 발전에 試金石이 되었다. 또한 한·중은 각기 7월과 10월 上海와 부산에 총영사관을 추

가 설치하여 정치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정부의 臨政先烈 遺骸奉還 요구를 수락하고 중국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한 한·중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한·중간 정치협력관계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994년에는 한·중간 정치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외무장관회담(10.2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瀋陽, 廣州, 靑島 등에 한국 총영사관이 추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이후, 중국은 일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질서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유엔안보리의 對 북한 제재조치 경고에 대해 기권(5.12)하고, 남북한과 미, 일 등 당사국들과 막후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한국 등 관련국과 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북한의 NPT탈퇴 철회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 바, 이는 한·중 안보협력관계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0월 한승주 외무장관의 방중시 한국과 중국은 武官部 교환설치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국은 12월 상대국 주재 대사관에 무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한·중은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12.2~

3)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협력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중 양국이 지역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호 안보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바, 1994년에도 한·중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과정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양국간에는 협력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금년 8월까지 한·중간 교역액이 57억 6천만달러에 달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교역규모가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의 7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對中 투자건수와 투자액도 계속 증가하여 8월말 현재 각기 472건 3억 5천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6대 對中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한·중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 정립이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韓國戰 참전을 정당화 하고 있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한·중간 정치·군사협력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문제도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한·중간 경제교류의 심화와 지도자 접촉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4년에는 1993년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항공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한국전 참전 정당화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94년에는 한·중관계가 질적으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韓·러關係

1993년 한·러간에는 諸分野에서 우호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에 대한 한국의 경협차관문제, 한국어선의 오호츠크해 조업문제 및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문제 등은 양국간 懸案으로 남아있다.

한·러 외무장관은 모스크바 회담(6.7)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시(7.24) 북한의 핵개발에 공동 대처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帝政러시아 公館敷地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하기로 하였고, 러시아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비밀문서 목록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역사와 관련하여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기술된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하였다.

아울러 한·러간 군사관계도 급진전 되었다. 駐韓 러시아武官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참관하였으며, 1992년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체결한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따라서 구소련시대 이래 최초로 양국간 합정방문이 실행되었다. 러시아 합정의 부

산한 기항(8.31~9.4)과 한국 함정의 블라디보스톡항 방문(9.22~25)을 통하여 軍民間의 우의와 친선이 공고해 지게 되었다.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의 訪韓時 체결된 「한·러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기초로 양국간 경험의 증대되었는 바, 1993년 상반기 교역량이 전년 상반기 대비 40% 증가한 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민수화 작업 지원을 위하여 「러시아 민수화 협력의향서」를 체결(8.16) 하였으며, 러시아의 非軍事 첨단기술분야 과학자 200명이 한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체에서 활동중이다.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에 대한 한국의 경험차관 문제와 KAL기 문제는 올해에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러간의 최대 현안인 舊蘇 경험차관(약속된 30억달러중 14억 7천만달러 제공) 상환문제가 러시아의 현물 또는 현금상환 거부, 무기에 의한 대체상환 요구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KAL기 사건 재조사 보고서」와 「KAL기 피격 유엔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러시아의 책임회피와 주변국가들의 정보 未公開로 KAL기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993년에는 한국의 오희츠크해 조업문제와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문제가 한·러간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러시아는 오희츠크해 어족보호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인근

공해에서 어로금지 조치를 취하였는 바, 한·러 등 관련 操業國들의 2차에 걸친 다자간회의가 이해대립으로 결렬된 상태에 있다. 또한 구소련은 1959년부터 동해 및 대평양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바 있으며, 러시아도 폐기물 저장시설 노후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핵폐기물 투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1994년에도 러시아는 국내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과의 제반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도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 및 원자재 확보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對러關係 확대를 모색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유학생 교류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을 통해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經濟面에서도 「러시아 민수화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의 민수화 작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한국기업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저렴한 중국 소비재 선호, 국내산업 보호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1996년부터 한국상품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 폐지 등은 한국의 對러 수출증대에 否定的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II. 北韓情勢

1. 對內情勢

가. 理念과 權力承繼

1993년 북한은 지배이념인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화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총노선 불변을 확인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와 관련,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하의 논문(3.1)에서 사회주의체제 붕괴 원인을 외부로부터의 사상침투, 사회주의 내부의 적 등으로 규정, 권력층과 ‘자유주의적’ 지식인에 대한 통제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식 사회주의」 이념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첫째, 당중앙위는 「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7.27)에 즈음, 사회주의체제 고수 내용이 주종을 이룬 250여개의 구호를 발표(5.11)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행동강령인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이 주창되었으며, 이와 관련 각 지역, 기관 및 공장별 쫓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둘째,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를 위해 민족 개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4.7)를 통해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¹⁾을 채택하였다. 이는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사회과학원은 단군실존론을 기조로 한 「단군릉 발굴 보고」(10.2)를 발표하였고 최고인민회의는 제9기 6차 대회를 통해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의안을 채택(12.9)하였는 바, 이는 사회주의권 몰락과 미국의 핵사찰압력 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허무주의를 불식시키고 민족정통성이 북한측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정통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노력도 예년과 같이 지속되었다.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에 추대(4.9)되었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는 그가 군령권을 장악하고 군사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통수권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김정일은 「휴전협정 40주」를 기념, 한국전쟁 참전 원로군관 99명(중장

1) 「10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적·평화적 통일국가, 즉 「범민족 통일국가」 창립, 둘째,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배격, 셋째,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 넷째,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정쟁중지, 다섯째, 상대방에 대한 위협, 침략, 제도강요, 흡수 중지, 여섯째, 민주주의 존중과 상이한 주의주장 포용, 일곱째, 통일 전·후 개인·단체 소유의 모든 재산 보호 및 인정, 여덟째,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한 이해증진 및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 기회 부여, 아홉째, 조국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 열번째, 민족대단 결과 통일에 공헌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그의 명의로 단행(7.19)하였다.

또한 북한은 승계과정의 취약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친·인척간 불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김영주와 김성애를 복권시켰다. 김영주는 1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7.26)한 이후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12.8)에서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에서 부주석에 임명되었다. 김성애는 「여맹」 제5기 18차회의(11.15)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정일은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3.8)하고 NPT 탈퇴 선언을 결정(3.12)함으로써 그의 지도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전쟁발발설을 유포하여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주민통합과 승계체제의 공고화를 기하려 하였다.

김정일은 ‘군·민일치’ 캠페인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권위 확보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등 8개 지역을 선정하여 「군·민일치 모범 군·시·구역 칭호」를 부여(7.1)함으로써 군·민간의 유대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통수권자인 김정일의 애민정신을 선전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을 인덕정치가로 포장하는 등 김정일 이상화에 주력하였다. 「로동신문」은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논설(1.28)을 통해 김정일이 인덕정치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김정일 수령승계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孝誠花의 전국적 보급, 백두산 밀영에 頌詩碑 건립 등을 통해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지속되었다.

해외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선전활동이 지속되었다. 북한방송 (1.16)은 김정일의 논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가 8개 국어로 번역·보급되었고, 일본 도야마(富山)현 등지에서 「김정일저작연구회」가 결성(5.19)되었다고 선전하였다.

1994년도 북한의 대내 정세와 관련,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 고수와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수령중심결속론’을 보다 강조할 것이며 남한에 대해서는 「10대강령」에 입각한 「민족태양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단군조상론」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은 승계체제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일수령론」을 체계화하고,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지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셋째, 1994년 김정일은 승계절차에 따라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에 보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 經濟事情과 經濟開放

1993년은 제3차 7개년계획('87~'93)이 종결되는 해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12.8)에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남한과의 군비경쟁으로 인해 공업생산의 총규모와 전력, 강철, 화학섬유를 비롯한 일부 중요지표가 원래 계획대로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사실 제3차 7개년계획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인 경제성장지표인 경제성장율은 <표 1>에서 처럼 1992년까지 6년간 연평균성장률 -1.3%로서, 이 계획기간 중 목표인 국민소득 1.7배(연평균성장률 7.9%)의 계획목표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²⁾ 북한경제는 1990년 -3.7%의 負의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1991년 -5.2%, 1992년 -7.6%로 3년연속 경제후퇴를 나타냈으며 199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³⁾ 1992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211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943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1993년도에 더욱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북한의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연평균
3.3	3.0	2.4	-3.7	-5.2	-7.6	-1.3

출처: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서울: 통일원, 각년도); 한국은행, 「1991년 북한 GNP 추정결과」(서울: 한국은행, 1992); 한국은행, 「1992년 북한 GNP 추정결과」(서울: 한국은행, 1993).

2)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중의 성장목표는 국민소득 1.7배, 공업생산 1.9배, 농업

둘째, 북한은 경제침체 주요원인이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1993년 상반기 중 석탄·전력·금속공업 부문의 생산증대에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 에너지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부문에 기계와 자재의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연간 1억2천만톤 생산 목표로 노력을 집중했으나 생산량은 목표의 1/3 이하 수준인 2,920만톤에 머물렀다.

셋째, 전력생산량 목표는 연간 1천억kwh이었으나 1992년말 현재 247억kwh에 불과하였다. 북한에서는 현재 금강산수력발전소 및 안주화력발전소 준공이 연기된 상태이고 남강수력발전소, 동평양·해주화력발전소 건설도 부진한 상태이다.

넷째, 철강의 연간 생산목표는 1천만톤이었고 이중 절반인 5백만톤을 김책제철소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992년말 총생산량은 179만톤이었다. 한편 1992년 비철금속 생산량은 연간 생산목표 170만톤에 훨씬 못미치는 17.8만톤에 그쳤고 연간 4만톤 생산규모의 부산리 알루미늄공장은 에너지난에 따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섯째, 북한의 식량난은 1993에도 지속되었다. 1992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26.8만톤(쌀 153.1만톤)이었다. <표 2>에서 처럼 북한의 연간 곡물수요 추정량은 약 658만톤(식량 490만톤, 가공용 61만톤, 사료용 48만톤, 감모분 43만톤, 종자

생산 1.4배, 대외무역 3.2배 등이다.

3) 평양주재 서방외교단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북한의 경제동향 조사보고에 따르면 1992년 북한의 GNP성장율은 -5%이다.

용 16만톤) 인데, 동북아 지역에 불어닥친 이상저온 현상으로 북한의 1993년 곡물 수확량은 평년보다 20~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은 1994년에 최소한 250만톤 이상의 곡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북한의 1993년 상반기중 對中곡물수입액은 7,410만달러로서 이미 작년 1년간의 수입액(6,848만달러)을 초과하였으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도 2억달러 상당의 곡물(25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표 2〉 북한의 곡물 수요량(정곡기준)

(단위: 만톤)

구 분	총 계	식 량	가공용	사료용	감모분	종자용
1992	650.0	484.7	60.5	44.2	44.6	16.0
1993	658.0	490.0	61.0	48.0	43.0	16.0

출처: 통일원, 「1992년도 북한의 식량수급현황 분석」(1993); 농촌진흥청, 「1992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1993).

여섯째, 1992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은 〈표 3〉에서 처럼 수출이 前年 對比 3.0% 감소한 9.2억달러, 수입은 5.2% 감소한 15.5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 무역액은 4.4%가 감소한 24.7억달러에 머물렀다. 교역량의 감소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무역규모의 하향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4) 중국해관 통계(199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2, 1993.

산업생산, 투자부문에 있어서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억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16.7	20.3	19.5	20.2	9.5	9.2
수 입	24.0	32.1	28.5	26.2	16.4	15.5
무역 총액	40.7	52.4	47.9	46.4	25.9	24.7

출처: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서울: 통일원, 각년도); KOTRA, 「9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KOTRA, 1992); KOTRA,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KOTRA, 1993).

대외무역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1991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3대교역 대상국인 대러시아 및 타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계속 감소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북한의 대외무역량이 1991년과 같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막아 주었다. 1992년에는 에너지 부족으로 북한의 수출주종 상품이었던 광산자원, 원자재 분야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출량도 감소된 반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특히 섬유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면서 의류제품들의 수출신장이 두드러진 점이 큰 특징이다.⁵⁾ 한편 1993년 상반기중

5)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對日本 제2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東洋經濟」, 1993. 6. 4.

북한의 對中國 무역액은 4.3억달러로 1991년 同期 對比 39% 증가되었고, 對러시아 무역규모(1~4월중)는 2.2억달러로 前年 同期 對比 40% 증가되어 대외무역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자유치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추가정비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및 「합작법」을 제정하고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한데 이어 1993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였다.⁶⁾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대외개방 법령정비에 주춤거렸던 북한은 최근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외국인기업과 개인에 대해 북한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는 「토지임대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은행설립과 지점개설 및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투자은행법」을 공포함으로써 해외자본·기술 유치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⁷⁾

서울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산업·자원분야 워크숍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621km²)

6)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無査證제도의 시행과 외국선박·선원의 자유입항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현재까지 북한이 외자유치와 관련해 공포한 법률은 합영법(1984)을 포함, 모두 11개법, 3개세칙이다.

를 125km² 추가하였으며 이 지역에 외국기업용 5개공단 설립을 위한 개발·투자를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대외경제개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향후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조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농업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 것을 천명했다.

1994년에도 러시아 및 동구국가와의 기존 우호 관계가 약화된 상태하에서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계획경제체제의 한계, 자본 및 기술부족, 에너지 부족,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저하 등의 부정적 요인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협상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짙은 바, 대미·일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됨으로써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적 폐쇄를 고집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자세를 견지한다면 단기간에 외국기업들의 급격한 투자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社會統制 및 社會逸脫

1993년도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명제하에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한편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체제공고화를 추구하였다. 사회통제와 관련된 행사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40주년」 행사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후 평양시 대회(1.4)를 필두로 도, 군, 공장·기업소 단위로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돌 맞이 군중집회」가 전개되었다. '승전의식'의 고취는 당 중앙위원회가 체제고수와 통일투쟁 등을 선동하는 250여개의 구호를 발표(5.11)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승리를 위한 지속적 투쟁전개, 사회주의 사수, 당과 수령의 결사적 옹호·보위 등이었다.

과거에 북한이 대남전술적 차원에서 수십개의 구호를 발표했던 것에 비해, 「조국해방전쟁 승리 4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구호들은 양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전국적으로 개최(5.14~20)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발의로 휴전협정 체결일(7.27)을 '민족적 명절'로 지정하고, '제 2의 해방의 날'로 경축하였다. 7월 27일을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전국로병대회」, 「전승기념탑 제막식」, 「경축 열병식」 및 100만 군중시위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당면 난국 극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전승의 자긍심과 전투적 충성심을 고취, 김일

성父子에 대한 절대복종과 사회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3.19)을 「전승 40주년」 관련 행사와 함께 내부 체제결속을 위한 호재로 적극 활용하였다. 즉 북한 당국은 이인모 노인을 ‘통일의 영웅’으로 선전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증명하는 상징적 징표로 삼았다. 이인모의 모교인 양강도 김형권郡의 파발인민학교를 「이인모인민학교」로 개칭하는 한편, 김정일은 그에게 북한의 출판보도분야 최고상인 「3.1월간상」을 수여하였다. 이는 이인모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투쟁심과 충성심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전후하여 ‘전쟁발발설’을 유포, 주민들의 사상적 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경각심을 자극하였다. 김정일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 전국·전군·전민에 대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3.8)하였다. 이어 평양시에서는 군중집회가 열렸고 동화관제훈련 및 방공훈련이 실시되었다. 또한 북한전역에 걸쳐 150만명의 청년학생과 수십만의 체대군인들이 자원입대 형식으로 군에 징집·복귀하였으며 「戰時가요」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은 전쟁 위기감을 조성하여 핵문제를 호도함과 동시에 체제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 결과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체제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경제적 궁핍상태와 주민들의

사회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대되고 있다. 북한군 중국탈출설(1993. 6)과 식량폭동설(1993. 8) 등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 있다. 특히 식량폭동설의 경우 북한 당국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식량배급을 위한 양권위조사건, 식량 절도범 단속 소동 등의 예를 북한 여행자들이 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식량부족에서 야기된 이러한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적 침체국면과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비조직적이고 음성적인 社會病理현상이 북한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활필수품의 전반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해 북한에서 外製生必需品이 암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중국, 일본, 미국 거주 親戚 및 시베리아 벌목공이 보내거나 소지한 생필품이 거간꾼을 통해 암거래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수요자는 당일꾼, 사회안전부, 행정일꾼의 가족 및 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이다. 그리고 高利私債業者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 고위간부나 비교적 餘裕가 있는 북송재일 동포 및 외화벌이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 도박이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간에는 符籍소지 및 점, 손금, 관상 등을 보는 迷信行爲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에서 性紊亂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젊은층들이 성관계를 대중목욕시설 부족에 빚대어 ‘때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평양의 외화상점 및 호텔주변에서 매춘이 행해지는 것을 두고 ‘기술과 자본이 필요없는 장사,’ ‘몸으로

합영하는 장사'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심지어 국경지대에서 북한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증거라는 점 외에도 성적 방만의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이와 관련 실제로 고등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도 성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1994년 북한에 있어서는 권력승계의 마지막 문턱에서 김정 일체제를 공고화하고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사상통일과 사회적 결속 노력이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반체제적 사회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면적인 사회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침체상황과 국제적 고립에 따른 허무주의 또는 패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1994년에는 경제적 개방과 개혁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범죄나 非行 등의 일탈 행위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 軍事動向

북한은 중국, 동구, 러시아에서의 개혁과 무관하게 '우리 식' 대로 살아야함을 강조하고, 사회주의권의 개혁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군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권력승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군지도자 권위 창출

을 위해서 ① 준전시 상태를 선포(3.8)하여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하고, ② 핵문제에 대해 강경 태세를 견지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③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3년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하여 인민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1983년 이후 처음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여 각 단체, 지역별 지지군중집회를 실시하고 전쟁준비를 촉구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핵문제와 관련한 강경태세를 국내외에 시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한반도의 이러한 군사적 위기조성 책임을 한·미측에 전가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민 동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에 대한 최후 통첩에 직면하여 NPT 탈퇴를 선언(3.12)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NPT체제에 정면 도전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통해 특별사찰을 회피하여 핵개발 증거 포착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능력에 대한 평가를 모호하게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핵보호성 정책을 통해 2단계에 걸친 對美 고위급 협상을 유도해냄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켰으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핵안전 적용의 공정한 보장’, ‘상호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등의 중요한 요구들을 관철시켰다. 또한 북한은 미·북한 핵협상 테이블에서 거의 강대국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여 향후 미국·한국·북

한의 삼자관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북한은 이러한 업적을 김정일의 정치·군사적 지도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체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치·외교적 효능성 외에도 군사력의 실질적 증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핵개발의 1단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폭장치 및 특수폭약 개발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 고품실험(핵개발의 2단계)을 1983년 부터 현재까지 70~80회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있어서 김정일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구해오던 군사력 증강정책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는 국방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 자체가 갖는 총체적 군사 억제기능 측면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개발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재래식 무력의 상대적 열세 가능성을 相殺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 1호 개발에 성공 (1993.5.발사시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사거리가 최대 2000km로 연장된 신형 미사일 노동 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量的 軍비증강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1992년도에 비해 병력 2만명, 부대수 1개, 사단/여단 8개, 전차 100대, 각종화포 500문, 함정 30척 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사훈련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1993년에는 전반적으로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 증강된 무기들의 전력화를 위한 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노력은 김정일의 군사이론을 선전하는 방송해설(10.7)을 통해 국방에서의 자위실현을 위한 무장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은 “우리 당이 밝혀준 대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 데 대한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면 그 어떤 원썩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전력증강 추진등 군사우위정책의 강행을 정당화 해오고 있다.

이와같은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각종사업을 벌여 왔다.

북한군 창건 61주년(4.25)을 계기로 보고대회, 당·정 간부들의 군부대 방문 등 각종행사가 개최되고, 국방위원장직에 추대(4.9)된 김정일의 군부 실권자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전승 40돌’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 개최와 함께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소위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인민군 군관 및 장령등 99명에 대해 승진을 단행(7.27)하여 군부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해 왔다. 8월 전군대상 ‘김정일 결사옹위 축구 대회’가 열린 것 역시 김정일 통치시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체제 수호의 보루인 군의 변함없는 충성심 환기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대외적 군사협력 측면에 있어서, 1993년 북한은 악화된 대내외적 전략환경 극복을 위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북·중, 북·러간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뒷받침 할 만한 물적증거는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휴전 40주년 행사 참석차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방부장을 訪北시켜 북한에 대한 유대를 확인한 수준에 머물렀다. 러시아는 쿠나제 외무부 차관의 방북시(2.1)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 1조의 적용에 대해서 선제도발이 아닌 피침여부 판단을 한후 러시아 헌법절차와 유엔헌장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행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북한은 내부체제 단속과 김정일의 軍指導者 권위 강화를 위하여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 유도노력 또한 배가할 것이다. 특히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재래식 무기 및 군사훈련 등을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핵개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IAEA의 핵사찰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 궁극적인 핵개발 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핵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한 실질적인 대남도발이라 든가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군사적 공격명분을 제공하게 되어 이라크와 같이 군사적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主要 對外關係

가. 北·中關係

1993년 북·중관계는 ‘형식적’ 우호관계에서 ‘실질적’ 우호관계로 회복되는 양상을 띄었다. 중국은 김일성(4.15), 김정일(2.16) 생일 및 북한 軍 창건(4.25) 61주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

하지 않는 등 북한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각종 대표단을 다시 교환함으로써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대북한 일변도 외교에서 대남·북한 균형외교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이 인정(5.29)한 바와 같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40주년」 기념행사(7.27)에 당·정 대표단(단장: 胡錦濤 당 정치국 상무위원, 부단장: 遲浩田 국방부장)을 비롯한 10여개 대규모 경축사절단을 파견하여 우호관계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이후 중국은 「人民日報」 사설(9.9)을 통해 부자승계체제 승인을 표명하는 한편, 북한 정권 수립(9.9) 45주년 축하단으로서 「全人大」 대표단을 방북(9.13-20)시켜 한·중 수교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 회복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도 김일성 주관하에 중국 사절단만을 위한 연회를 개최(7.28)하는 한편, 중국 정권수립(10.1) 44주년에 즈음 김일성과 강성산 총리 명의의 축전을 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 李鵬 총리등 중국 당·정 수뇌부 앞으로 보내 양국 우호관계의 지속을 적극 도모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이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제재조치 동참 여부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는 긴장과 우호의 양면성을 보였다. 전기침 외교부장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희망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1차 결의안에 중국이 기권(5.25)하여 대북한제재에 묵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와 양국간 우호관계 회복과 더불어 지호전 국방부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사실보다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봉 총리는 대북한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의 제1교역국 위치를 점해 왔다. 북·중간의 무역은 1985~1990년 년평균 5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에는 6.2억 달러, 1992년에는 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前年對比 각각 29.2%, 12.9%의 증가를 보였다. 1992년 북한의 對中 수입량은 5.4억 달러로 1991년 5.3억 달러에 비해 1.8%의 저조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對中 수출량은 1.6억 달러로 전년 0.9억 달러에 비해 77.8%의 대대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절대액을 고려하면 저조한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북·중간의 무역량이 기존의 북·소(러)간의 무역량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측이 1993년 부터 양국간 교역시 경화결제 도입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1992. 12.29)한 것에 기인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에 따른 수출품목의 다양성 결여 및 질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화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정부간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북한은 물물교환방식의 변경무역을 양성·활성화하는 한편, 흑룡강성(6.20)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협관계를 강화

하였다.

1994년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일 세대와 중국의 혁명 2세대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식량난 및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로부터의 원조 및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한편,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북·중교역 및 경험의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주변환경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을 영향력 하에 두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994년에도 군사적 우호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北·러關係

1993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조정이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균형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회복을 모색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이데올로기보다 경제적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재조정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양국은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한·소 수교 이후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인사 교류

가 없었던 바, 로가초프 외무차관의 방북('92.1)과 쿠나제 외무차관의 방북이 전부였다. 쿠나제는 러시아가 「조·소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제 1조의 자동군사개입조항(침략받을시 원조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의 NPT협정 준수 및 IAEA 특별사찰 수용을 권고하였다.

또한 콜로코모프 외무차관은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양국관계에 있어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음을 천명(4.29)하였고, 러시아 최고회의는 시베리아 소재 북한 별목장 내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6.18; 9.14)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북·러 임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반발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으나 쿠나제 외무차관과 회담(9.23)을 통하여 외무부간 인사교류 재개합의 및 북한 핵문제·동맹조약·시베리아 별목협정 개정문제등을 협의함으로써 관계재정립에 적극 나섰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국은 소원화 경향을 보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완성 단계에 왔음을 경고하고 루츠코이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IAEA 특별사찰을 지지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한 제 1차 결의안 채택(5.12)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외교부는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를 격렬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내정간섭 및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편 동맹조약과 관련, 그라초프 국방장

관은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만 유효함을 천명하여 동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간 교역 및 협력 동향은 비교적 안정적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1991년 5.3억 달러에서 1992년 6억달러(대리수출 2억 달러, 대리수입 4억 달러)로 낮은 수준에서나마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3년에도 교역을 지속시켜 초기 4개월간 2.2억 달러(대리수출 3천5백만 달러, 대리수입 1억8천5백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여 前年 同期對比 40%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경제관계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대리 채무문제('91년 기준 30억 달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소련 붕괴이후 최초로 고위급 경제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8.6~16)하여 민간차원의 무역 협회 창설에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 및 협력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북한의 제한적 경제개방정책과 러시아 국내사정 안정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북·러 관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더 이상 정치적 동질성을 추구할 수 없는 바, 양국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정치관계보다 경제·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국은 동맹관계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를 쉽게 단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외무부의 대북 군사동맹관계 재

조정 의지와는 별개로 러시아 국방부의 대북 군수물자 판매는 지속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교역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화 및 북한의 외화부족과 수출품 결핍으로 인하여 급속히 신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가 해결되고 러시아의 국내사정이 안정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北·日關係

1993년 북·일관계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핵개발의혹으로 냉각상태가 지속되었다.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8차 수교회담('92. 11. 5)이 결렬된 이후 1993년에도 재개되지 못하였다. 북·일관계의 부진은 인적교류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양국간 경제교류도 전년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과 일본은 정치적 냉각관계를 지속해 왔다. 냉각원인은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영변 핵단지내 2개 미신고 지역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거부에 기인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1월 김일성의 1993년도 신년사를 분석한후 팀스피리트 훈련이 종료하는 4월 이후에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핵연계정책을 비난(2.14)하고, 일본 미야자와 총리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임을 밝힘(3.9)으로써 북·일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당도 북한의 NPT협정 준수를 촉구하였

으며, 통산성은 NPT복귀시까지 북한에 대한 기계·화학제품의 금수를 결정하였으며, 신임 호소가와 총리도 핵무기 개발의혹 불해소시 국교정상화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위하여 미국에 동조하여 시대착오적인 책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강화하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대일수교회담에 불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 실험 및 「로동2호」 개발의혹은 북·일관계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정거리가 1천킬로로 예상되는 「로동1호」 발사실험으로 인해 일본은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위(TDM)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군사대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침략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일본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일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1992년 교역액은 4억 8,024만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의 대북수출은 2억 2,289만 달러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렀으나, 수입은 9.2% 감소하여 2억 5,739만 달러에 머물러 총교역액은 前年 對比 5.4%가 감소하였다. 북·일간 경제교류 부진은 북한의 핵문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 핵개발 의혹에 따른 경제제재 가능성이 일본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켰다. 북한은 일본의 「대외경제

추진위원회」 소속 대표단에게 두만강 개발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북한의 정치적 위험성을 고려 중국지역 두만강 개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은 임가공 교역을 증대시키고 있다. 1992년 가을 부터 북한산 신사복의 대일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도오교의 숙녀복 업체들도 공동으로 북한에 봉제업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임가공무역의 확대는 기존의 조총련 중심의 무역관행(전체의 90%)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일관계의 협상에 있어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과거 청산 문제도 주요 이슈중의 하나였다. 북한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조사 공개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였고,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8.4)를 통해, 일본의 불성실한 자세를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을사5조약에 대한 고종의 친서발견을 계기로 일본의 반성과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의 과거 죄행을 두둔한 남한정부를 비난하였다.

1994년도의 북·일관계는 핵협상이 전향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핵사찰 이전일지라도 북·일교섭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이 거북하게 여겼던 북·일수교 대표를 나카히라

노보루에서 엔도 데츠야로 교체하였고, 엔도 데츠야는 핵문제 해결이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북일 정상화회담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북·일관계 진전을 위한 준비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의 호소가와 연립정권에는 사회당이 참여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교류도 북·일수교협상이 재개되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여 일본의 마루베니와 미쓰이와 같은 종합상사도 대북진출을 대비한 투자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994년에는 이미 활성화된 의류중심의 임가공무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대북한 직접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北·美關係

1993년 북한은 핵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접촉수준의 격상 및 일부 정치·군사적 보장을 담은 북·미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3.12)를 통해 미국 주도의 NPT체제에 정면도전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후 협상과 국제적 압력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NPT 탈퇴번복을 유도 하였다. 북경에서 미국과 북한은 제30차(3.17), 제31차(3.19) 참사관

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번복에 관한 협상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미국은 IAEA 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UN 안보리로 상정하는 것을 결의하도록 촉구(4.1)하였다.

미국은 UN 등 국제기구를 동원,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 특별사찰 수용 압력을 가하는 한편 북한과 북경에서 접촉(5.5; 5.10),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2차례(5.17; 5.21)의 고위급회담 예비회담 개최후 제1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6.2)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뉴욕 UN본부에서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과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을 모두 4차례(6.2; 6.4; 6.10; 6.11)에 걸쳐 개최(1단계 고위급 회담)한 결과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핵안전 적용의 공정한 보장, 상호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등을 요지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고위급 북·미회담의 결과를 휴전협정 이후 최대의 대미 외교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중단조치 해제를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제1단계 고위급회담에 이어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을 3차례에 걸쳐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에서 번갈아 개최(7.14; 7.16; 7.19)하였다. 제2단계 회담에서 북한

은 미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과 핵무기 한국내 불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팀스피리트훈련 종식과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IAEA와 핵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경수로 지원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협을 포함한 대북 관계발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IAEA 핵사찰 및 남북대화 거부로 인해 북·미간 공식적 관계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미간 경제관계 역시 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미국은 오히려 대북 달러화 송금 금지조치(8.7)까지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10개월간 2억달러 상당의 양곡을 미국으로 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북한 인적교류는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위원장 애커만 의원이 북한을 방문(10.9~12), 김일성과 북한 핵사찰 수용문제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10.11)한 정도였을 뿐이다.

1994년 북·미관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미간 협상의 진전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NPT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현재와 같은 파국상태로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역시 대미관계 협상창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북·미간 정체상태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 미국은 결

렬사태 회피를 위해 점진적 해결을 위해 막후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북·미간 미군유해 문제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미군유해 17구를 판문점을 통해 미군당국에게 직접 인도(7.12)한 이래 4회(11.30; 12.7; 12.14; 12.21)에 걸쳐 총 161구의 미군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미국측에 인도함으로써 대미 유화적 제스처를 표명해 왔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북·미 제 3단계 고위급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同 회담에서 북한과 IAEA 핵사찰 협상이 전향적으로 타결되고, 남북대화 또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과 미국간 경제교류·협력 역시 경수로 지원과 같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차원의 인적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對南戰略

1993년에도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달성 전술로서 「민족」을 부각시켰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 선전·선동을 강화하였다. 김일성은 NPT탈퇴선언으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 9기 5차회의(4.7~9)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고 이의 동조세력 확보를 위해 남한측 인사들에게 편지공세를 펴고 각종 대남 선전선동 매체

를 통해 「10대강령」 실천에 동참하도록 학생·노동자들을 선동하였다.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통해 「10대강령」과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한국 정부와 2천여명의 각계 각층 단체 및 인사들에게 발송(4.24)하는 한편,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선동하여 「10대강령」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12.9~11)議題의 하나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상정하여 북한의 민족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일성 및 노동당의 문화우선정책에 대한 찬양과 남한의 ‘비문화성’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민족의 조상인 단군실존론’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내 정통성과 수령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의 태양’인 수령중심의 남북통일과 이의 실현을 위한 대남선전선동 강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화유산」 강조도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10대강령」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범민련」은 북경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5.29~30), 제4차 「범민족서울대회」 개최를 합의하고 「당면투쟁과업」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면투쟁과업」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첫째, 민족대단결 실현투쟁의 확산, 둘째 주한미군·핵무기 철폐 및 대북 핵압력·제재 저지, 셋째 한국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철폐, 넷째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 도출, 다섯째 범민련 조직확대 및 남측본부 결성 등에 대한 투쟁

강화 등이다.

또한 「범청학련」도 「한총련」소속 학생과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및 청년대표간 전화통화로 제1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5.29), 판문점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전민족대단결에 입각한 연방제통일과 민족대단결, 통일 장애물 제거와 「범청학련」의 조직강화 등을 결의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다짐했다. 따라서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당면투쟁과업」은 북한의 「10대강령」에서 제시된 내용 실천에 있다는 점에서 「범민련」과 그 산하기구인 「범청학련」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위기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고려대학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5.27)에 「범청학련」 북측본부 명의의 전문을 발송, 「한총련」의 출범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학생조직들의 조직적·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 시키는데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찬양하고 「한총련」이 향후 북한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들과 「범청학련」의 “대오에 굳게 뭉쳐 애국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電文은 한국청년학생들의 반미·반정부 투쟁을 독려했다. 결국 북한은 「한총련」까지 대남 통일전선 전위기구화 할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1993년 북한은 특사교환논의를 비롯해 정부간 접촉은 도외시한 채 비정부간 접촉만을 지속하는 2중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이효재, 윤정옥 공

동대표 등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였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이강평 명예총무를 10월 24~25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게임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UNDP 주최 「두만강개발 제2차 산업자원분야 워크숍」(11. 8~10)에 황정남 대외경제추진위원회 과장 등 2명의 북한대표를 참석시켰다.

반면 북한은 문민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계속하였다. 북한은 「평양방송」(2.25)을 통해 “군부파쇼 무리들의 집합체인 민자당에서 나온 대통령 당선자가 문민정치를 고아대도 그것은 파쇼정치외에 다른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높이 들자 투쟁의 기치를」 제하의 「평양방송」 논평(3.1)을 통해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단합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 논평(6.8)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한총련」 과격시위에 대한 엄단경고를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기도를 드러낸 것으로 현정권이 역대 정권과 다름없는 파쇼정권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다”고 주장, 전통적인 남한정부파쇼론을 재론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신식민지 파쇼예속정권’이

라는 전통적 대남관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향후에도 정권타도를 위한 선전·선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인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조선」(12.4)을 통해 “남조선농민들이 생사를 걸고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선동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의 쌀시장개방책동은… 용납할 수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 비난함으로써 농민들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였다.

1993년도 북한이 「민족」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민족허무주의의 극복과 대내 통합, 김영삼대통령의 민족우선 강조에 따른 상층통일전선결성 시도 및 하층통일전선 강화, 핵문제 관련 국제적 압력에 대한 한민족의 공동 대처 호소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에도 북한의 대남관인 ‘신식민지 예속과쏘정부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민족과 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대강령」 실천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학생,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즉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념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1994년에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 남한정부를 ‘미제 신식민지 예속과쏘 정권’으로 매도하고 농민을 민족의 주인으로 부각, 정부타도 선전·선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하고 「10대강령」 6항을 근거로 양심범 석방과 함세환, 김인서 등 비전향장기수들의 복송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사정 악화와 주민들의 사기저하, 남한내 문민정부 출현에 따른 운동권의 약화, 미국·일본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재개 압력 등으로 인해 대남전술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북한은 「10대강령」에서 제시한 「범민족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남한정부를 민족대단결 입장에서 통일세력으로 포함, 각계 각층을 망라한 가칭 「범민족통일국가창립협의회」 구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북한인민들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민족허무주의에서 탈피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남한에 대해서는 ‘자주국가’인 북한과 수령에게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단군조상론’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정통성 보유 과시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망라된 「단군학술조사단」 내지는 「단군묘지방문단」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Ⅲ. 南北韓關係

1. 核問題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간 비공개접촉을 개최(1.25)하였으나, 북한이 韓·美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의 우선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相互核査察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韓·美 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1.26)하자,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1.29)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로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臨時査察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臨時査察을 통한 자체 분석 간에 「중대한 不一致」(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IAEA는 영변에 소재한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2곳의 未申告施設이 군사시설로서 IAEA 사찰대상이 아니며 IAEA는 제3국의 정보를 사찰에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特別査察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와 IAEA의 특별 사찰 촉구 決議案을 비난하면서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3.12)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韓半島와 東北亞의 최대 현안이자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 정부는 정부대변인 성명(3.12)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간 合意事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북한이 조약탈퇴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IAEA의 核査察을 허용할 것과 南北 相互査察에도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IAEA 이사회는 4월 1일 북한을 핵안전협정 不履行國으로 선언하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 安保理에 상정하였다. 유엔 安保理는 결의안 825호를 채택(5.12)하고 북한이 NPT 탈퇴결정을 재고할 것과 IAEA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의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관련 당사국들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미·북한 高位級會談이 실현되었다. 이는 對北韓 군사제재를 적극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도 가급적 유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번복을 유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뉴욕에서 개최된 제1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6.2~11)에서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NPT 탈퇴선언의 效力을 정지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NPT 탈퇴 결정을 사실상 유보하였다. 또한 미·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② 핵안전협정의 공정한 적용, ③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 ④ 상대방의 주권 존중, ⑤ 내정 불간섭, ⑥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

제1단계 미·북한 회담 결과를 놓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미국 정부의 평가(6.11)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측의 우려(7.1)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2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7.14~19)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2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IAEA와 核安全協定の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남북대화도 재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2개월 후에 개최하기로 예정된 제3단계 회담의 前提條件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를 재확인했고 기존의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핵무기 개발이 어려운 輕水爐로 전환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北韓·IAEA間 協商이나 南北對話 모두 진전을 보지 못함으로써 제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AEA와 북한간의 불신의 골은 매우 깊어지고 있다. IAEA는 8월 초 영변 핵시설의 監視裝備를 점검하기 위한 사찰단을 파견하여 배터리와 필름을 교환함으로써 사찰의 連續性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평양에서 개최(8.31)된 북한·IAEA 간 협상에서 2곳의 未申告施設에 대한 사찰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제37차 IAEA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엔나에서 10월 5~8일 갖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2차 북한·IAEA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로 대응하였다. 결국 IAEA 총회는 북한이 IAEA와 즉각 협력하고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決議案을 채택(10.1)하였다. 한편 서울을 방문(10.17~19)한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이미 신고된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거부함으로써 핵안전협정의 不履行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된 핵시설과 핵물질도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제48차 유엔 총회(11.1)에서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핵안전협정과 관련한 자료의 계속성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核査察의 繼續性이 중단되었다고 단언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관련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유엔 총회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決議案을 찬성 140 對 반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11.1)하였다. 한국도 외무부 대변인 성명(11.2)을 통해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를 존중하여 핵개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재차 촉구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25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11.3~4)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19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추후 결정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談話(11.12)를 통해 북한과 미국 쌍방이 정당한 자세에서 다같이 동시에 움직이기로 한 회담의 합의정신이 미국측에 의하여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북한 쌍방이 서로 실시할 조치를 정해놓고 동시에 움직이는 「一括妥結」(a package deal) 방식을 거듭 제의하였다. 강석주 부부장은 제3단계 미·북한 회담이 열리고 여기에서 일괄타결 방식이 합의되면 핵문제 해결의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괄타결 방식이야말로 미국이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대화의지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試金石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석주 부부장의 담화에 대하여 美國무부는 11월 12일 미·북한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核査察의 연속성을 충분히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북한 공동성명에서 확립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3단계 회담에서는 기꺼이 핵문제의 「包括的 解決策」(a comprehensive solution)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포괄적 해결책」이 南北對話를 排

除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1월 23일 개최된 워싱턴 韓·美 頂上會談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IAEA 사찰 수용과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제3 단계 美·北韓 會談은 개최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러한 한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반면에 양국 정상은 북한이 이상의 2가지 前提條件을 충족시킬 경우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법」(a thorough, broad approach)을 논의하고 북한 핵문제를 일거에 타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후 한·미 양국 대통령은 12월 7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포함한 7개 申告施設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허용하고 特使交換을 위한 南北對話에 성의를 보일 경우, 19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고 제3단계 미·북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북한도 그후 개최된 미·북한 실무접촉에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全面査察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현재 진행중인 미·북한 고위급 회담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양측은 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쌍방이 제기한 현안들을 一括妥結하는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왔다. 북한과 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지난 6월 이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쏟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妥協點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미·북한 협상이 실패하여 對北韓 制裁措置가 실시될 경우 야기될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을 우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또한 북한 핵문제의 平和的 解決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1994년에는 NPT체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1995년에 效力이 만료되는 NPT의 期限 延長 및 修正問題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몇차례 개최될 것이며, 이 회의에서 현재 NPT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TBT)의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는 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한 보장책으로 CTBT를 체결하여 NPT의 차별성을 비난하는 핵비보유국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조만간 해결하여야 하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금까지 「NPT 탈퇴유보」라는 특수상황을 구실로 對美 一括妥結論을 내세워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는 「遲延戰術」로 일관하여 왔으나, 북한의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유엔 安保理의 制裁措置가 발동될 경우 이를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1994년 2월의 IAEA 理事會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미·북한간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이 IAEA 臨時査察을 수용하고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와 함께 남북간 特使交換이 성사되어 핵문제 및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1994년 상반기 중 IAEA 임시사찰 수용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여도 이는 북한이 NPT 탈퇴 선언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북한 핵문제의 透明性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IAEA 특별사찰문제와 남북상호사찰문제가 다음 과제로 제기되어 1994년 하반기에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측이 外交的 協商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끝내 거부하고 유엔 安保理의 제재조치에 돌입하는 불행한 사태가 전개될 경우, 북측의 예측불허한 정책결정과정과 무모한 행동패턴을 감안할 때, NPT 탈퇴유보를 철회하고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거나 이른바 「自衛的 措置」의 일환으로 유엔 탈퇴를 선언하면서 현장 구속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강석주 부부장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는 선전포고로서 정전협정은 자동 파기될 것”이라 언급(6.12)하였듯이, 停戰協定 파기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法的 交戰狀態로 몰아가면서 내부체제 결속과 우리 국민의 安保不安心理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2. 當局間 對話

1993년 1월 25일 제1차 핵통제공동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당국간 대화의 명맥은 이어졌으나, 韓·美 양국이 對北壓力的 수단으로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계획을 발표(1.26)하자 북한측은 이를 구실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모든 南北對話를 전면 거부(1.29)하였다.

남북대화가 동결된 상황에서 남한의 문민정부 출범과 북한 핵문제가 국제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측은 南北合作·統一戰線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6월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개시된 이후에는 對美柔軟·對南強硬 전략을 추구하였는 바, 1993년도의 南北 當局間 對話는 10월에 들어 特使交換을 협의하기 위한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만 이루어졌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라는 민족우선론과 함께 南北頂上會談 개최를 촉구하였으며, 신정부는 민족복리, 공존·공영, 국민적 합의라는 3대 정책 기조하에 새로운 統一政策을 추진하면서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무조건 송환(3.18)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준전시상태」를 선포(3.8)하였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월 25일자 대북한 特別査察 결의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며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NPT 탈퇴를 선언(3.12)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핵위협을 중지하고 IAEA가 獨自性和 公正性を 회복할 때까지 NPT 탈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부기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촉구(3.29)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한편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측은 남한의 문민정부에 대한 공식 비난을 자제하다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및 4개 對南 요구사항(①외세의존정책의 포기, ②미군철수 의지 표명, ③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④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탈피)을 제기(4.7)하여 통일전선전술의 體系化를 시도하였다.

남한측은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일(6.12)을 앞두고 北韓 核問題 해결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북한측에 제의(5.20)하였는 바, 이 제의는 남한의 新政府 출범 이후 최초의 對北提議로서 美·北韓 高位級會談 및 韓·中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중대사에 대

한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特使交換」을 逆提議(5.25)하였다. 북한이 규정한 특사의 任務는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 논의와 남북한의 제반 현안 타결을 위한 최고위층의 의사 전달이며, 특사의 資格은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통일문제 전담 副總理級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특사교환의 意義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 창출과 민족화합 및 통일의 실질적 진전 달성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特使交換 형태의 남북대화를 제의한 의도는 첫째, 北韓 核問題의 성격을 「민족내부 문제화」함으로써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國際的 壓力을 회피하고, 둘째, 「민족대단결」을 내세워 한·미관계 이간 및 우리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동시에, 셋째, 會談方式의 다양화를 통해 高位級會談 등 기존의 남북관계 틀에서 벗어나는 한편,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우리측의 對北政策 추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측은 제1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6.2~11)을 계기로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한 가운데 對美協商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핵문제를 대미접근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대미회담」, 「從 남북대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측은 7월 이후 미국측에 미군유해 104구 인도, 애커만 하원의원의 판문점 통과, 대미 비난중지 등 유화자세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 수정에 따라 북한측은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제3단계 미·북한 회담 성사를 목표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10.5~25, 3회)에 일시 호응하다 곧 중단시켰다.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이전까지 남북간에는 제의 및 거부가 반복(書信 및 電通 24회 교환)되었다. 북한측은 6월 26일 「93 을지훈련」을 이유로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남한측의 核統制共同委 再開 제의(8.4)에 대해서도 팀스피리트 훈련, 國際共助體制, 제4차 「범민족대회」 등을 이유로 거부(8.9)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고위급회담 대변인 담화를 발표(8.31)하여 남한정부의 ‘적대적인 核戰爭演習’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 여부에 대한 명백한 태도 표시를 전제로 쌍방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 特使交換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이 제의를 통해 특사교환에서는 ①非核化問題와 함께 긴장완화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共同對策을 시급히 취하는 문제, ②전민족의 大團結을 도모하는 문제, ③最高位級會談을 실현함에 있어 제기되는 제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한측은 對話形式보다는 對話內容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任意的 級」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 북한측에 특사교환에 필요한 절차협의를 위해 실무대표 접촉을 9월 7일 개최하자고 제의(9.2)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9월 8일까지 남한측의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不追求에 대한 態度表示를 요구하는 한편, 실무대표가 접촉(9.20)할 것을 제의(9.6)하였다. 이후 남한측은 북한측의 조건부 실무대표 접촉

제의에 유감을 표명(9.8)한 바 있으며, 북한측은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9.18)을 통해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 체제 不追求에 대한 남한측의 태도표시를 촉구하고, 남한측의 태도표명 시한을 9월 30일로 설정(9.21)하는 한편 10월 5일의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처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남한측의 적극적 수용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무리한 전제조건으로 인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國際原子力機構 總會에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對北決議案이 채택(10.1)됨으로써 북한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북한측은 前提條件을 명시하지 않고 실무대표를 10월 5일 판문점에 파견할 것을 통보(10.2)하였고, 이러한 북한측의 제의를 남한측이 수용, 1993년 들어 처음 南北 當局間 對話가 이루어졌다.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한측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접촉에서는 특사교환 節次問題만을 협의·타결할 것을 요구,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절차문제를 제시하면서도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 체제 포기 등 2가지 要求條件과 서해간첩선 문제, 생화학무기 개발문제 등 특사교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차 실무접촉(10.15)에서는 양측이 특사교환에 따른 절차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제3차 실무접촉(10.25)에서는 북한측도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는 바, 특사의 임무, 교환시기 등에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特使의 級, 수행

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등에 있어서는 의견이 접근하였다. 또한 양측은 11월 중 특사교환 성사 및 11월 4일 제4차 실무접촉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사교환이라는 새로운 南北對話 通路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유엔 總會에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對北決議案이 채택(11.2)된 상황에서 북한측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의 담화(11.3)를 통해 남한국방장관이 11월 2일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군사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남한이 군사적 대응을 선포”한 것이므로, 북한은 “언제까지나 대화에만 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특사교환 실무대표단 북한측 단장은 제4차 실무접촉을 거부(11.3)하였다. 또한 11월 9일 실무대표단 북한측 단장은 제25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사교환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外勢 排除, 각종 ‘전쟁연습’ 중지 등을 요구하며 남한 정부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敵對態度를 표출하는 한편, 「기본합의서」 채택 2주년이 되는 12월 13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정부의 외세와의 야합, 「기본합의서」 정신 위배, 각종 전쟁연습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본합의서」가 不履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93년도 남북관계는 정통성 있는 文民政府의 출범으로 對北協商 여건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내용면에

서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당국간의 和解·協力 基調가 사실상 와해되고, 회담빈도 면에서도 단 3차례의 접촉만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악의 냉각국면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 이유는 북한의 체제불안 증대와 핵문제에 연유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문민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對北政策으로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통일전선 차원의 聯共合作 기도가 무산되었다는 점과 한국정부를 배제한 對美接近 전략의 새로운 시도에 따라 북한은 南北對話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교착되었다. 특히 북한은 核問題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문제, 서방세계의 경제지원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關鍵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의 장애물인 동시에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體制安全 보장 및 國際孤立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93년도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핵카드를 이용, 남한을 배제한 채 對美協商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측과 국제공조체제 및 南北協商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남한측의 단호한 입장이 맞물려 남북관계가 파행으로 일관하였다고 평가된다.

1994년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 핵심 요인은 북한의 정책방향이다. 북한은 1993년 12월 8일부터 11일사이에 개

최된 제6기 2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제9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을 평가하고 당조직을 개편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북한의 政策方向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향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한 점에 비추어 경제난 심화에 따른 주민불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완충기간 중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전략적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면적인 開放·改革이 아니라 제한적인 개방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될 것이다. 셋째, 권력구조 측면에서 김영주의 재등장과 온건·개방 성향의 김달현·김용순의 퇴진·지위격하, 당 중앙위원회에 군부인사의 다수 등용(16명중 9명) 등은 김정일 체제 구축에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이 強性基調를 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화」 전략기조는 적어도 미·북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은 미·북한 협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남북대화를 진행,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피하면서 韓·美 이간 및 안보협력체제의 약화를 촉진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1994년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체제불안, 핵문제, 대남 강경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南北和解의 接點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그 후유증

이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의 본격적인 履行體制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南北對話와 관련하여 북한이 IAEA 임시사찰을 수용할 경우 남북간에는 特使交換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형식적인 남북대화 전략과 제시된 특사의 임무(협의 의제)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실현문제의 최우선적 협의·해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남북상호사찰 문제 등을 핵통제공동위 협의사항으로 미루는 지연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민족대단결」 문제, 頂上會談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정치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여부는 미·북한간 고위급회담과 IAEA·북한간 사찰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남북고위급회담 체계의 재가동 및 「기본합의서」 실천 문제와 관련하여, 1994년도 후반기에 들어 미·북한관계의 진척으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은 이미 對南電通(5.31)을 통해 고위급회담 체계를 사실상 부정하였고,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시 예상되는 체제동요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기본합의서」 이행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4년도에도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 이행단계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는 소극적 반응을 보일 지라도 1995년 분단 50주년을 앞두고 국내 일부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연방제 통일 선전과 함께 정치협상회의, 8.15 범민족대회 공세 등을 강화하는 한편, 단군능 발굴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민족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문화합작 명목의 統一戰線 攻勢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족 대단결 노선에 입각하여 정신대문제, 일·러의 동해핵폐기물 투기문제, 일본의 핵무장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북민간차원의 反外勢 공동대처 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당면한 체제불안, 외교적 고립, 경제난 등이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더욱이 북한의 체제유지와 對南戰略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의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4년에도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상황이 고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交流·協力分野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남북한 교역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하는 「대통령 특별선언」(1988.7.7)과 그 후속조치로 인해 본격화된 남북한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여 승인된 교역규모를 볼 때, 1990년 2천5

백만 달러에서 1991년 1억9천만 달러, 그리고 1992년에는 2억1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이유로 교류·협력공동위원회('92.11.15 예정)와 제9차 남북 고위급회담('92.12 예정)을 무산시킨 이후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냉각되어 교역량도 감소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3.12)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한 기업들의 대북 교역이 더욱 신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경제난 및 외환 부족으로 반입을 억제함으로써 1993년 남북한 교역규모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1993년 11월 말 현재 남북한 교역규모는 승인기준으로 463건 1억 9천만달러로서 前年 同期의 370건 2억 달러에 비하여 7%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감소 추세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11월 말 현재 남북한 교역규모를 남한 입장에서 반입과 반출로 분류하여 前年 同期와 대비해 보면, 승인기준으로 반입은 약 5% 감소한 반면 반출은 약 42% 감소하여 반입보다 반출이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3년도 承認對比 通關比率은 아래 <표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승인기준 교역규모의 절대적 감소로 인하여 1992년 81.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89.3%를 유지하고 있다.

〈표 4〉 南北間 搬出入 總計

〈건수/천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1989	4/ 1,037	66/ 18,655	/	1/ 69	4/ 1,037	67/ 18,724
1990	75/ 20,354	78/ 12,278	4/ 4,731	4/ 1,187	79/ 25,085	82/ 13,465
1991	328/ 165,996	300/ 105,722	40/ 26,176	23/ 5,547	368/ 192,172	323/ 111,269
1992	365/ 200,685	510/ 162,863	44/ 12,818	63/ 10,563	407/ 213,503	573/ 173,426
1993*	406/ 177,701	504/ 160,152	57/ 7,436	57/ 5,262	463/ 185,137	561/ 165,414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현황」, 제29호.

* 1993년도 통계는 승인의 경우 11월 말, 통관은 10월 말 현재 수치임.

1993년 10월까지 品目別 통관현황을 분석해 보면, 반입의 경우 금괴, 아연괴, 빌레트 등 철강·금속류가 전체의 87.8%를 차지하여 우위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농·임산물이 5.4%, 섬유류가 4.3%를 차지하고 있어 1992년도와 대비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반출의 경우 메탄올 등 화학제품의 비율이 75.6%에서 20.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섬유류의 비율이 4.7%에서 71.8%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부 소비재 품목 등 其他 分類品目이 9.4%를 차지하였다. 이는 섬유류의 경우 質

加工交易(위탁가공교역)의 형태를 띠고 있어 북한이 섬유류의 원·부자재 반입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交易 形態는 간접교역, 직교역, 구상무역, 임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直交易이 성사된 사례로는 9월중 한약재 백봉령 200t이 반입된 것을 들 수 있으며, 구상무역으로는 9월중 남한산 재봉틀, 콩기름, 냉동 콩치와 북한산 냉동조기를 물물교환한 사례가 있었다.

남한기업이 북한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들여오는 형태인 임가공교역은 1991년 1건이 성사된 데 이어 1992년에는 5건(44만2천 달러)으로 늘어 났으며, 1993년에는 5월말 현재 17건(243만2천 달러)으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물자 및 外換 不足으로 교역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북한이 임가공교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기업도 북한의 低賃金 노동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3년 말 현재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입승인금액 기준으로 1992년도의 0.3%에서 2.0% 수준으로 계속 신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10월 현재까지 경제분야의 人的 交流는 주로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된 회담 및 동북아 경제포럼 등 다자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남북한간 雙務的 接觸은 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1994년도 남북한 경제교류는 핵문제 협상에 크게 좌우될 것

인 바, 북한이 核査察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남북한 교역은 다시 활발해 질 것이다. 이미 남한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7.2 발표)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합작투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기업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데 이어, 최근들어 「토지임대법」을 채택(10.27)하여 외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북한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32개항의 「외국인투자은행법안」을 채택(11.26)함으로써 외국 및 외국합작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자유무역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無비자 入國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발표(12.7)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며,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후진적인 생산능력으로 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므로 1994년도 남북교역의 급격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貨加工交易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남한기업은 의류·섬유제품·봉제가공 부문의 원·부자재만을 북한에 공급하였으나 1994년에는 원·부자재의 반출이 家電製品·전자부문·정밀기계 부문 등으로 확대될 것이며, 대상업종의 확대와 더불어 남한기업이 북한에 자본·설비 등 機資材도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합작법」(1992.10.15 제정)에서 기자재 공급형 임가공교역을 합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가공교역의 확대는 사실상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가공교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994년 말까지는 남북한이 남포공단에 경공업분야의 소규모 合作投資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간에 합작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기술자들의 상호방문이 촉진될 경우, 남북한 합작투자는 남포공단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남북한은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발표시키고,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분야의 附屬合意書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南北交流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에는 북한의 核開發 의혹으로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됨에 따라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前年度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1년의 경우 남북간 社會·文化 交流는 89건에 956명이었으며, 1992년에는 37건에 609명이었으나, 1993년에는 11월말 현재 26건 221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1992년 남북간 직접교류는 2건이 성사되었으나, 1993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가 평양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11.7~8)함으로써 1건의 직접교류만이 성사되었다. 그 이외의 사회·문화 교류는 모두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제3국에서의 대표적인 사회·문화 교류사례로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4차 「世界觀光機構 東亞·太地域委員會」(2.18~2.19)에서의 남북대표 접촉, 미국버클리대학교 주최 제2회 「한반도통일문제심포지움」(4.14~21)에서의 박형규 목사 일행과 북한 조평통 위원인 김완수 등의 접촉, 東京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4.22~30)에서의 이우정 의원 일행과 북한 여연구 일행의 접촉, 대륙연구소가 러시아과학원과 공동 주최한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지 공동발굴조사」에서의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부소장과 고려대 김정배 부총장의 접촉, 제1회 동아시아대회 (5.9~18)에서의 대한조정협회 회장 일행과 북한 선수단장 강득춘 일행의 접촉 및 북측선수단의 「서울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10.21~24) 참가문제 협의

등이 있다.

1993년 사회·문화분야에서 南北間 交流가 減少한 것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었기 때문이나,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는 바, 구체적인 事例는 다음과 같다.

3월 15일 통일원은 업무보고에서 1995년까지 남북교류협력 기금 1조원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핵문제 해결시 상호 방송 교류 및 히로시마 아시아경기 단일팀 참가 추진을 밝혔다. 또한 3월 19일 미전향 장기복역수 이인모노인을 人道的 次元에서 북측에 송환하였으며, 4월 20일 통일정책 당정협의회는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추진과 남북대학간 비정치적 목적의 자료 교환 및 자매결연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7월 23일 문화체육부는 「문화창달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광복50주년 기념 남북공동민속잔치’ 개최 및 1997년까지 통일국어대사전 공동발간을 제의하였으며, 9월 3일 문화체육부 장관은 남북체육교류 3단계 계획으로 축구를 비롯하여 비슷한 수준에 있는 종목의 친선경기 교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9월 22일 통일원장관은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처를 남북이 함께 강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1993년도 남한의 사회·문화교류 추진방향은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남한의 신정부는 人道主義的

사항에 대해 북한측에 일방적인 양보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관계에서 自信心을 피력하였다. 둘째, 남한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확충하고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中長期的인 대비책을 공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도하에 정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비정치적 성격의 民間交流方案이 적극 모색·제안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3월 22일 북한의 조선문화예술총연합에 「남북해외문예인 공동사업」을 제안하였으며, 3월 30일 남한의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4월의 부활절예배를 서울에서 공동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또한 8월 27일 연고대 학생회가 북한학생들을 연고전에 초청하려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남한정부와 민간단체가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現實的인 方案을 모색·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이를 政治的 手段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범민족대회」에 대한 남측 대표단의 참여 허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남북간 인간띠잇기 대회를 정치적 행사인 범민족대회 개최와 연계시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4년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體育交流面에서 남북한은 1994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여 및 1995년 평양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남한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人的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學術交流面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므로 남한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북한 개최를 지원할 경우 다수의 학자나 기술자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藝術·文學·民俗學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도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간접접촉이 먼저 확대된 후 점차 직접적 접촉을 추진하는 순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내부의 정치체제가 갖는 불안정으로 인해 남북간 교류는 여전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체제불안정 요소가 나타날 경우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직접교류가 대폭 확대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가 북한체제의 개방과 체제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離散家族問題

1993년중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남북간의 對話 斷絶로 인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 核問題로 인해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아진 결과였다. 특히 1993년 2월 출범한 신정부가 이인모 노인 송환 등 적극적인 對北 和解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이산가

족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기대되었으나, 결국 북한의 핵문제가 장애가 되어 이산가족문제는 관심사항이 되지 못하였다.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한 이산가족들의 대북주민 접촉 신청과 성사사례는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 접촉허가 신청사례를 볼 때, 1992년 267건에 비해 1993년 11월 현재 712건에 이르렀고, 성사건수도 1992년 121건에 비해 1993년 11월 현재 260건에 달하여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는 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여행이 용이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향후 한·중간 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1994년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북한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체제불안정이 증폭될 경우, 북한은 주민의 중국방문을 統制할 것인 바, 이산가족상봉도 制限될 것이다.

1994년 한국정부는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남북간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와 고향방문단 정례화 실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특히 이산가족의 生死·所在 확인과 書信往來 등 가족상봉 이전단계의 필요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다룰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權力承繼라는 대내적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취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대화의 공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노부모 상봉문제를 북한의 사회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體制威脅 要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994년 중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는 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991년 9월 17일 유엔가입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의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 접촉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재조치 발동문제가 논의되면서 1993년 중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접촉과 협력은 남북관계 냉각과 함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3년도의 저조한 접촉실적과 핵문제로 인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동해에 대한 명칭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협력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상호 협력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말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本會議에 참석한 남북한 대표들은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日本海(Sea of Japan)의 명칭을 東海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 李錫祚 참사관은 “동서양의 고지도나 역사적 관행으로 보아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東海 또는 大韓海(Sea of Korea)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도 “일본해라는 것은 어느 국제회의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상 상용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교섭이 필요하다면서 남한 정부의 제안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종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1993년 중 남북한은 구체적인 협력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상호 공통된 인식하에 국제무대에 대처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유엔人權小委員會(8.2~8.27)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릇된 過去史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전문가 임명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협력과 공동보조 사례 이외에 남북한이 접촉한 사례로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993년에는 제3차 計劃管理委員會 會議와 분야별 專門家會議가 개최되었다.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計劃管理委員會 會議(5.9~10)에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 회원국과

유엔개발계획 등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분야에 대한 2개의 협정안을 채택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한 남북한은 ①통신분야 전문가회의(1차 1993.1 서울, 2차 1993.4 길림, 3차 1993.9 블라디보스톡), ②법·제도·금융분야 회의(1차 1993.3 뉴욕, 2차 1993.9 북경), ③자원·산업·환경분야 회의(1차 1993.3 헬싱키, 2차 1993.11 서울), ④수송분야 회의(1993.3 북경) 등 분야별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북한은 1993.3 헬싱키회의에 불참),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의 대표들이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동참하여 두만강지역의 산업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非政治的 分野에서 신뢰구축을 도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대표단이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計劃管理委員會 會議에 참가한 것과 북한대표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1.11)에 참석한 것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3년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한 사례는 적었던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갈등은 두드러졌다. 북한은 국제민간기구를 통해 미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對南 宣傳 및 便紙攻勢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 赤十字社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포로에 관한 자료가 1992년 12월 14

일 경남 거제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남한 적십자사 총재 및 國際赤十字社 앞으로 同 資料의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5.5~6)하였으며, 이어 金永南 외교부장은 거제도 인민군포로의 송환문제와 관련,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5.25)하였다.

그후 북한은 김인서·함세환 등 두명의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위한 탄원서를 國際赤十字委員會 總裁에게 제출(6.2)함으로써 이인모 방북허용조치(3.19) 이후 다시 미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발송(8.24)하여 이들 2인의 북송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북한 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요구하는 편지를 대한적십자사에 발송(10.12)하는 등 적극적인 대남편지 공세를 전개하였다.

한편 북한의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은 제48차 UN총회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핵문제의 북·미간 해결' 등을 주장(10.5)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간 적대관계 해소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한편 북한의 핵문제 협상대상으로 IAEA보다는 美國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대결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 특히 동해명칭 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력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1994년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회의가 재개될 경우 동해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해명칭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남북한은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공동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1994년 상반기에 열릴 제4차 計劃管理委員會 會議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공동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인모 송환 이후 북한이 또다른 미전향 장기수의 귀환을 요구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대남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협력이 1994년을 통하여 급격히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附 錄

11

12



부록

1993년도 主要事件日誌

- 1. 1 김일성, 신년사 발표
 - 통일에 관한 「민족자주의 원칙」 강조
 - 고려연방제 통일론 주장
 - 1. 3 美·러, 제2단계 戰略核 감축협정 조인
 - 다탄두지상발사 핵미사일 전량 폐기
 - 10년내 양국 보유 전략핵무기 2/3 감축 합의
 - 1.13 한국 등 117개국, 化學무기 금지 협약 서명(파리)
 - 1.16 일본, 미야자와 독트린 발표
 - ASEAN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대화에 적극 참여
 - 1.18 북한, 홍콩주재 한국의 4개 상사(삼성, 대우, 럭키, 현대)에 대
 - 해 구상무역 제의
 - 북한의 아연과 강재, 남한의 곡물과 석유 교환 제의
 - 1.20 클린턴, 미대통령 취임
 - 1.23 북한,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요구
 - 1.25 남북한 핵통제공동위, 위원장 접촉 결렬
 - 1.26 韓·美, 제17차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공동발표
 - 1.29 손성필 駐러시아 북한 대사,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경우
 - IAEA 핵사찰 거부 의사 표명
 - 북한, 南北高位級會談 재개 거부 의사 표명
 - 대화거부 이유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공식발표를 지적
- UND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1차 통신전문가 회의 개최(서울)

－ 북한 대표단 참석

- 1.3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채택
2.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
－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개정 논의
2. 2 북·중, '93~'94년 문화교류협정 체결
2. 8 북한 외교부, IAEA의 특별사찰 거부 의사 표명
- 2.11 IAEA, 북한의 특정 核施設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 2.12 북한, IAEA 특별사찰 요구 거부
북한 「사로청」, 제8차 대회에 전대협 대표 초청
- 2.16 손성필 駐러시아 북한 대사, IAEA의 특별사찰 강행시 핵안전협정 파기 경고
- 2.17 중국, 王丹 등 반체제인사 석방
- 2.18 클린턴 미대통령, 종합경제정책 발표
갈리 유엔사무총장,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지지
- 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 대북관계에서 「민족」 중시 의사 표명
- 2.26 IAEA 이사회, 對北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 영변 핵단지내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 촉구
3. 1 북한 외교부, 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對日 수교회담 거부
3. 8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 북한 전역에

「준전시상태」선포

- 3. 9 韓·美,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 3.12 북한 중앙인민위, 제9기 7차회의에서 NPT 탈퇴 성명 발표
 - 사회주의 고수 위한 자위적 조치
 - IAEA의 공정성 및 독자성 확보시까지 탈퇴
 - 미국의 對북 적대시 정책 수정
 - 팀스피리트 훈련 즉각 중지
- 3.14 한국, 북한의 NPT 脫退 決定 撤回 때까지 南北對話 잠정중단 결정
- 3.15 韓完相 副總理, 적극적 통일정책 표명
 - 대북정책 3대 기조: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 南北交流·協力基金 '95년까지 1조억원으로 擴充
- 3.17 허중 駐UN 북한 부대사, NPT탈퇴 철회 조건 제시
 - IAEA의 공정성 확보
 -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 남한내 미국의 핵기지 완전 공개
 - 핵공격 불실시 보장
- 3.19 한국, 미전향 장기수 李仁模 북한 송환

북한, UN安保理에 NPT탈퇴 결정에 관한 서한 제출

북·중,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

 - 나진항 부지임대 및 항구시설의 전면적 사용 허용
- 3.22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 북한 조선문화예술총연합에 「남·북·해 외 문예인 공동사업」 제안
 - '94년 東學 백주년 기념사업 및 '95년 光復 50주년행사 공동개최

- 3.24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준전시상태」 해제 명령 하달
- 3.27 중국 제8기 全人大 1차회의, 江澤民을 國家主席으로 선출
- 3.29 중국 제8기 全人大, 시장경제 헌법 채택
 - 「국가소유의 경제」라는 용어를 「국가관리경제」로 바꿈
 프랑스 사회당, 총선 참패
- 3.30 김광섭 駐오스트리아 북한 대사, 영변의 2개 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 수용의사 표명
 - 한국 부활절 연합예배회, 北韓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광복절 예배 공동 개최 제의
- 4. 1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UN안보리 회부
- 4. 5 미·러 정상회담
 - 「새로운 민주적 동반자관계」 수립 내용의 「벤쿠버 선언」 채택
 - 16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직접지원과 G-7회원국 등 국제적인 러시아지원 종합방안 확정
- 4. 6 金泳三 大統領, 對北政策 3大 기본입장 제시
 - 북한의 孤立 不願
 - 북한의 개혁추진 지원
 - 인내심있는 對北 직접대화 지속
- 4. 7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기
 -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범민족 통일국가」 창립 제안
- 4. 8 UN安保理, 북한 핵문제 외교적 해결 촉구
 - 한국, 소말리아 파병 결정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UN安保理,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촉구
- 4.12 북한외교부, 동해 핵폐기 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부 비난
- 4.15 미·러, 戰後 첫 합동군사훈련 실시
- 4.16 미·일 정상회담
-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일본의 美첨단산업 상품 수입 증대 촉구
- 4.19 한국, 「新經濟 5個年 計劃」 指針案 발표
- 서울 평양간 經濟代表部 상호 교환설치 추진
- 4.20 한국 統一關係長官會議, 북한 核問題와 관련 기본입장 확정
- 북한의 NPT 복귀 및 남북상호핵사찰 실현
- 4.21 허종 駐UN 북한 부대사, 미국측에 NPT 복귀를 위한 5개 조건 제시
- 팀스피리트훈련영구 중지, 한국 핵기지 사찰, 핵공격 불사용 약속, 핵우산 정책 포기, 북한 사회주의 존중 등
- 4.24 최광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북한군 건군 61주년 중앙보고회에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시 자위조치 강조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한국 정부 및 2천여명의 정당·단체 대표들에게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송
남북한 女性代表, 제4회 「아시아의 平和와 女性の 역할 심포지엄」 참가(東京)
5. 5 북·미, 제32차 참서관급 접촉(北京)

- 5월중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 5.12 UN安保理, 북한 NPT 탈퇴결정 再考 촉구 결의안 채택
- 5.17 미·북한, 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접촉 개최(뉴욕)
 - 고위급회담 일정 및 장소 논의
- 5.18 한국 국회,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및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덴마크, 「마스트리히트조약」 승인
- 5.20 黃寅性 총리, 姜成山 북한 총리에게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제의
영국하원, 「마스트리히트조약」 승인
- 5.21 미·북한, 고위급회담 제2차 예비접촉
- 5.23 북한 3개 대표단(노동당간부, 여맹, 적십자회의), 중국 방문
- 5.25 姜成山 북한 총리, 통일사업 전담 副總理級 特使交換 제의
 -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일정(5.31) 제의
- 5.26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방한(~28)
갈루치 美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북한 핵문제 관련 미측 요구 제시
 - NPT 탈퇴선언 철회, 핵사찰 협조, 비핵화 선언 실천
- 5.27 미국, 對中 최혜국대우 연장 결정
허중 駐UN 북한 副대사, 6개항의 對美 요구조건 제시
 - 對北 핵무기 불사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기지 공개, 對韓 핵우산 제공 중단, 북한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 주한미군 철수
- 북한, 중국 접경지대 5개 도시에 시장 개설
- 5.29 황인성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6.5) 제의

- 강성산 총리의 특사교환 제의(5.25)에 대한 역제의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일본 방문(6.1)
 - 북한핵문제 관련 공동 노력
 - 양국간 安保 對話 개최 합의
 - 5.30 「범민련」, 제4차 범민족대회 서울 개최 합의
 - 5.31 강성산 북한 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6.4) 수정 제의

 - 6. 1 한승주 외무장관, 신외교 5대기조 제시
 -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 등
 - 6. 2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 우선원칙 고수하에 특사교환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6.5) 제의
북·미, 제1단계 1차 고위급회담 개최(UN주재 미국 대표부)
 - 6. 3 허창조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한총련」의 6.12 남북청년학생회담제의 수락 서신을 김재용의장에게 보냄
 - 6. 4 강성산 북한 총리, 특사교환만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6.8) 제의
북·미 제1단계 2차 고위급회담 개최
 - 6. 5 한국 통일관계 고위전략회의,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와 북·미고위급회담에 따른 대응책 논의
 - 특사교환만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거부 입장 표명
 - 6. 6 田紀雲 중국 全人大 상무부위원장 방한(~12)
 - 한·중 의회 교류 합의
 - 6. 7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 해결 문제 및 특사교환 협의 제의
 - 북측의 실무접촉 제의(6.4) 수락
- 한·러 외무장관 회담

- 북한 핵문제 해결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6. 8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무산
 - 북한, 남한 제의에 대해 회답 거부
 강성산 북한 총리, 실무접촉(6.10) 수정 제의
 - 핵문제 제외 주장 일본 사회당, 한국인정 新綱領 채택
 - 사회주의 용도폐기, 미·일안보조약 및 한·일기본조약 인정 등 포함
- 6. 9 황인성 국무총리, 북한의 실무접촉 제의(6.8) 수락표명
 - 핵문제와 특사교환문제 동시논의 재천명
- 6.10 북·미, 제1단계 3차 고위급회담 개최
 - 북한, 남한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제의 거부
- 6.11 강성산 북한총리, 실무접촉(6.15) 수정 제의
 - 북·미, 제1단계 4차 고위급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지지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 IAEA의 핵안전협정 공정성 보장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
 - 상호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 북한의 NPT 탈퇴 보류
- 6.12 북한, 사정거리 1천km급 「노동1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 6.14 황인성 국무총리, 북한의 실무접촉 제의(6.11) 수락
- 6.15 강성산 북한총리, 실무접촉(6.24) 수정 제의
- 6.16 북한, 중국에게 청진항 사용 허가

- 6.22 황인성 국무총리, 북한의 실무접촉(6.24) 제의 수락표명
 - 핵문제와 특사교환 문제 동시논의 촉구
- 6.23 강성산 북한총리, 실무접촉(6.24) 거부 의사 통보
- 6.27 UN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채택

- 7. 2 한국, 「신경제 5개년계획」 확정
 - 핵문제 해결시 남북교역 및 합작투자 활성화 표명
- 7. 6 金泳三 大統領, 신정부의 통일정책 3大基調 제시
 - 민주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복리의 정신
- 7. 7 일본,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공식희망
- 7. 8 클린턴 미대통령, 「新태평양공동체」 창설 추진 천명(동경)
- 7. 9 G-7정상회담, 경제선언 발표
 - 세계경기 부양책, UR타결, 러시아 지원문제
 북한, 17구의 미군유해 송환(7.12) 미국측에 통보
- 7.10 북한, 「합영법 시행세칙」 전면 개정
 - 합영대상 제한(북한을 존중하는 외국투자가에 한정)
 - 농수산업, 경공업, 건재공업 대상
 - 환경피해업종 금지
 - 법령·규정위반시 합영기업의 자격정지 및 해산
- 7.11 클린턴 美대통령, 「新태평양공동체」 안보구상을 위한 4대과제 제시 (서울)
 -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공약 준수
 - 대량파괴 무기 확산금지 노력
 - 공동주체에 관한 역내국가간 대화
 - 역내 민주화 및 개방화 추진

- 7.14 北·美, 제2단계 1차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 7.16 北·美, 제2단계 2차 고위급회담 개최
- 7.19 北·美, 제2단계 3차 고위급회담, 3개 합의사항 도출
-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 위한 IAEA와 협상 재개
 - 남북한 대화 재개
 -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 일본 자민당, 일본총선에
서 과반수 확보 실패
- 7.20 美상원 외교위원회, 對대만 무기 수출 제한 철폐안 가결
- 7.21 美하원, 對중국 최혜국 대우 연장 결의안 통과 러시아, 시베리아
13개 북한 벌목장 폐쇄 결정
- 7.23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창달 5개년 계획」 발표
- 광복 50주년('95) 기념 남북한 공동 민속잔치 개최 제의
 - '97년까지 통일국어대사전 공동 발간 제의
- 7.26 김영주, '76년 5월 이후 처음 공식 석상 등장
ASEAN확대외무장관 회의 개최(~28)
- 「ASEAN 지역포럼(ARF)」 창설 합의
- 美의회, 2000년 북경올림픽 유치 반대 결의안 채택
- 7.27 중국, 북한의 「전승 40주년 기념」 행사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
- 胡錦濤 당정치국 상무위원, 遲浩田 국방부장 등
- 7.29 美·우크라이나, 방위협정 체결
- 7.30 일본, 「非自民-非共産」 聯政 출범
- 호소카와 총리 지명
8. 1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제4차 범민족대회 실무회담에 대표
파견 방침 발표

8. 4 황인성 국무총리, 북한에 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
백인준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범민족대회 3차실무회담(8.6) 북
측대표단의 서울 방문 허용 촉구
8. 5 러시아 중앙은행, 제2通貨개혁
- 舊소련공화국에서 러시아은행으로 이전되는 루블화의 평가
절하
8. 6 북한 외교부,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조사결과 발표 비난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제4차 범민족대회에 대표 파견 방침
표명
8. 9 북한, 러시아에 고위 경제 사절단 파견
- 양국 경제 관계 발전 논의
북한, 남한의 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8.4) 거부
- 특사교환을 통한 문제해결 촉구
- 8.10 남북한, 제45차 UN인권소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 진상조사 전문
가 팀 구성 촉구
일본, 호소카와 내각 출범
- 8.13 「범민련」 북측 본부, 범민족대회 남·북·해외 분산개최 천명
- 8.20 중국 공산당 中央紀律檢查委員會, 5대 反부패조치 지시
- 8.24 국제올림픽위원회, 2000년 올림픽 시드니 개최 결정
- 8.27 미국, 對중 경제제재 조치 단행
- 중국의 對파키스탄 미사일 부품 수출에 대한 제재
延·高大 總學生會, 「연·고 민족해방제」에 북한 대학생 초청 의
사 표명
- 8.31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특사자격에 관한 수정 제의
- 最高位級이 임명하는 任意의 級特使交換 제의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만문제와 中國 統一에 관한 백서 발표

- 9. 1 미국, 新방위 5개년계획 발표
 - 한반도와 중동 등 2개지역 동시 승리 「Win-Win」 전략 채택
- 9. 2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실무접촉(9.7) 제의
- 9. 3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연·고 민족해방제」 실무회담 대표 파견 의사 표명
- 9. 6 강성산 북한 총리, 황인성 총리의 실무접촉 제의(9.2) 거부
- 9. 8 미·러, 국방장관 회담
 - 군사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서명
- 9. 9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상호승인 합의
- 9.10 러시아 헌법재판소, 엘친의 私有化 조치 違憲 판결
- 9.13 중국, 全人大 대표단(王翰斌 상무위 부위원장 등) 북한 파견
 - 클린턴 美대통령, 對베트남 무역 제재조치 1년 연장 결정
 - 북한 및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 지속 표명
 - 美하원, 북한 핵문제 관련 결의안 채택
- 9.15 미·북한, 제35차 참사관급 접촉(北京)
 - 미국, 남북대화 재개되지 않는 한 제3단계 고위급회담 불가 통보
- 9.18 북한, 서방 차관도입을 위한 경제대표단 홍콩 파견
- 9.21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양형섭 의장), 동남아 국가 순방
 - 엘친, 의회활동 정지 선언
 - 미 의회, 「티베트법안」 채택

- 9.22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IAEA 협상 등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전제 조건 반대 의사 표명
韓完相 부총리,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실현 촉구
- 9.23 북한, 러시아 기업과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 두만강 지역의 나진·선봉지구 개발
- 9.24 북한 외교부, 일본의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구상 비난
담화 발표
- 9.27 최학근 북한원자력공업부부장, IAEA에 2차협상 거부 서한 발송
- 9.29 김일성, 중국 창건 44주년 기념 강택민 총서기 등에 축전
10. 1 IAEA, 북한의 NPT 이행 촉구 決議案 채택
10. 2 북한 사회과학원, 단군릉 발굴 보고
러시아 보안군, 최고회의 지지 시위대에 발표
10. 4 북한 외교부, IAEA 결의안 거부 성명 발표
- 핵문제 해결 위한 미국과의 직접협상 주장
10. 5 中國, 지하核실험 실시
남북한, 제1차 특사교환 實務代表 接觸
- 특사교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 실패
- 10.10 김영삼 대통령, 非核化원칙 고수 천명
- 10.11 김일성, 애커먼 미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면담
- 10.12 한국 「民藝總」·북한 「文藝總」, 「코리아 통일 미술전」 共同 開催(東京)
- 10.13 엘친 러시아대통령 호소카와 일본총리, 도쿄선언
- 경제선언 및 北韓의 IAEA 核사찰 수용 촉구 공동성명 채택

택

- 10.1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북한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요구로 합의점 도출 실패
- 10.16 북한 적십자회, 미전향 장기수(김인서, 함세환) 복송 관련 서한 발송
- 10.17 러시아 환경 부장관, 핵폐기물 동해 투기 사실 인정
- 10.22 허중 駐UN 북한 부대사와 허바드 국무부 차관보 접촉
 - 미국이 「수교 내지 이에 준하는 조치」 보장시 핵문제 총괄 협의 의사 표명
- 10.23 북한 외교부,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중단 촉구 성명 발표
- 10.2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남한, 특사교환 수용시 '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 북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발표 후 11월 중 특사교환 실시 주장
- 10.26 韓完相 부총리, 평화적 목적을 위한 남북한 원자력 共同開發 제안
 러시아, 東海 核투기 영구중단 선언
- 10.27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방문(∼30)
 북한, 외국투자가와 투자기업을 위한 「土地質貸法」 채택
 북·중, 나진항 신부두 및 훈춘-훈성간 신철도 공동 건설 합의
- 10.29 EC 12개 회원국, 벨기에 특별정상회의 개최
 - '94년부터 유럽통화통합(EMU) 제2단계 진입 선언
- 10.31 찰스 프리먼 美 국방부차관보, 중국 방문(∼11.2)
11. 1 UN총회 본회의, 대북한 핵관련 결의안 채택

- 찬성 140개국, 반대 1개국(북한)
- 마스트리히트조약 공식 발효
- 11. 2 러시아, 「신군사독트린」 채택
- 11. 3 박영수 북한 실무 대표, 제4차 특사교환 실무접촉 거부
한국 南北民間交流協議會, 민간교류 위한 민간인 회담 豫備 實務
接觸 제의
「서총련」, 남북 청년학생들의 交流許容 촉구
- 11. 4 韓·美 年例安保 協議會 본회의(11.3~4), 공동성명 발표
 - 북한 핵사찰 수용 촉구
 - 駐韓 미군 2단계 감축 유보
 - '94년도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2억 6천만달러 확정
- 11. 6 한·일 정상회담, 「한·일신경제협력기구」 및 「한일포럼」 설치
합의
- 11. 7 UNDP 北韓代表團, 서울 「두만강 개발 제2차 산업자원 분야 워
크숍」 참석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단(이효재, 윤정옥), 일본의 戰
後處 理문제에 관한 평양 國際討論會 참가
- 11. 8 북·중, 항공·운수 협정 조인
- 11.11 중·러, 「군사협력협정」 체결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 對미 핵문제 관련 일괄타결 요구 성
명 발표
중국, 제14기 3中全會(~14) 개최
 -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 결의
- 11.17 美하원,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
- 11.19 APEC각료회의, 시애틀선언 채택

-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 타결
추구
- 11.20 APEC지도자회의, 「APEC 지도자 경제비전 성명」 채택
미·중, 1989년이래 최초 정상회담 개최
한·중, 정상회담 개최
- 11.23 한·미, 정상회담 개최
 - 핵사찰 및 특사교환 조건 충족시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동의
- 11.24 북한 赤十字會, 대한적십자 총재에게 電通文 발송
 - '92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견된 인민군 유물 返還 요
구
 - 북·미 뉴욕 實務接觸
 - 韓美 頂上間 合意事項 북한 전달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투자은행법안」 공포
- 11.30 북한, 미군유해 33구 UN군사령부에 인도
- 12. 2 한·중, 정책기획협의회 개최(~3)
- 12. 3 북·러, 시베리아 벌목사업에 관한 새임업협정 협상 실패
미·북한, 실무접촉
 - 북한, 일부 핵시설에 대한 臨時査察 許容 표명
- 12. 7 북한, 자유무역지대 방문 외국인 無비자 入國 허용
 - 韓美 電話 頂上會談, 북한 核問題에 관해 협의
- 12. 8 북한, 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
 - 김영주를 정치국 정위원으로 선출
 - 제3차 7개년계획('87~'93) 실패 시인

12. 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11)
-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사업강화' 발표
 - 건설법 채택
 - 국장법, 토지임대법, 외국인 투자은행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세관법 수정 보충
 - 김영주 당정치국 위원 및 김병식 조선 사민당 위원장 부주석으로 피선
- 12.10 북·미, 뉴욕 실무접촉
- 12.13 한·미, 쌀시장개방 조건 합의
- 러시아, 국민투표(12.12)에 의한 개헌안 통과
- 한국, 直交易 통한 1천 3백 60여톤 北韓產 漢藥 搬入 許可
- 북한, UN軍 遺骸 33구 송환
- 12.15 GATT,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 채택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합의
- 12.17 러시아, 親엘친계 「러시아의 선택」 제1당 부상(94석 획득)
- 12.20 중·일, 안보대화 개최
- 12.22 갈리 UN사무총장 방한(~24)
- 12.24 갈리 UN사무총장 방북(~26)
- 12.26 미·러, 우주 개발협정 체결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一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1993~1994

年例情勢報告書 9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232-4725, FAX：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272-1767

印刷日 1994년 1월 일

發行日 1994년 1월 일
